

공 · 동 · 체 · 주 · 의 · 자 · 치 · 대 · 학 · 건 · 설 · 을 · 향 · 한

제 2 대 학

the other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해방이화 제2대학국

■ 목 차

2 • 제 2 대학 운동이란 무엇인가?

4 • PART 1 - 역사 강좌

- 5 제 1 부 •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평가
- 11 제 2 부 • 민족주의의 환상을 던지고 공산주의로
- 19 제 3 부 • 조선공산당의 창건·투쟁·좌절
- 29 제 4 부 • 민족해방운동의 고양
- 39 제 5 부 • 김일성과 항일무장투쟁, 그리고 북한의 역사인식
- 47 제 6 부 • 해방이후 조선공산주의 운동의 역사

52 • PART 2 - 성 강좌

- 53 제 1 부 • 강간을 이야기 한다.
- 57 제 2 부 • 우리는 강간을 이야기 한다.
- 63 제 3 부 • 지금 우리는 강간을 이야기 한다.

74 • PART 3 - 문화 강좌

- 75 제 1 부 • 이제 독립영화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 81 제 2 부 • 한국 독립영화의 무지를 깬다.
- 85 제 3 부 • 당신이 바로 독립영화의 주인이다.

제2대학 운동

(ALTERNATIVE UNIVERSITY MOVEMENT)

제2대학 운동은 학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교육과는 별도로 학생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교육을 통해 자본주의 교육이 가진 문제점을 극복하는 새로운 자치적 교육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이다.

학교 수업 듣기에도 바쁘게 사실인데 왜 그것과는 별도의 새로운 교육 질서를 만들려는 것일까?

예를 들어 노동현장에서 무엇을, 얼마만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는 자본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며 그 결과 노동 과정에 대한 아무런 결정권도 가지지 못하는 노동자는 노동에서 소외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학교교육 역시 그 근본적인 결정권은 교육 자본의 손에 놓여 있다. 어떤 내용을 교육할 것이며, 누가 그것을 가르칠 것인가는 학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며 학사업무에 대한 - 예를 들면 교직원 임용권이라던가 - 모든 결정권은 재단에게 주어져 있다. 또한 교육과정은 강의실이라는 일정하게 틀 지워진 공간에서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엄격히 구분되어지며 가르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은 소외된다. 다시말하면 자본주의 사회의 학교교육은 본질적으로 학생들을 소외시키는 가운데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물론 때때로 진보적인 교수님들의 강의시간에는 진보적인 사상이 배우는 사람을 주체화시키는 방식을 통해 교육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이며 자본주의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구조를 바꾸어 놓지는 못한다. 더구나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재작년 경상대에서 있었던 '한국사회의 이해'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인 학문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한국사회에서의 교육은 배우는 사람의 소외를 심화시키고 자본-임노동 관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대학, 자본에 포위되어 가는 대학의 현실.

피동적 제도교육으로서의 대학교육을 근본적으로 뛰어넘는

'대안적인(ALTERNATIVE)' 교육체계를 향하여.

진보적인 사상과 학문을 향한 행동을 고민하고 모색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운동(MOVEMENT)'

제에 순종적인 노동력을 재생산 해내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물론 그러한 자본주의 학교교육에 맞선 교육노동자들과 학생들의 투쟁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등록금 투쟁 등 '학원자주화투쟁' 혹은 '교육개혁투쟁'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은 자본주의 학교교육에 저항해 왔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투쟁은 학교교육 그 자체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제기라기보다는 부패한 재단에 대한 투쟁이나 제도교육 테두리 내에서의 개혁에 머무르는 것이었다. 이에 반해 제2대학 운동은 제도교육 밖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자치적인 교육질서를 만들려는 운동이다. 또한 제도교육의 테두리에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자치적인 교육질서를 만들려는 운동이다. 또한 제도교육의 테두리에서는 불가능한 새로운 교육질서에 대한 실험들을 진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존재기반인 자본주의 학교교육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과 제도교육 자체에 대한 거부를 위한 운동이다.

제2대학운동은 이제까지는 별로 고민되지 않았던 비제도권 영역에서의 자치교육질서를 만들려는 새로운 시도이며 자본주의 교육의 울타리를 넘어 그 본질을 부정할 수 있는 풍부한 상상력을 제공해 주는 운동이기도 하다.

HISTORY

기획의도

일제하 조선 땅에서는 한 번의 굴함도 없이

일제에 맞서 조선 민중과 함께 싸우다가 죽어간 혁명가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운동은 한반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 단절되었으며

이후 남·북한 정권 모두에게서 버림받았다.

현재 남한 정부가 계승하고 있는 임시 정부 법통론과

북한의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에 놓는 역사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우리는 역사의 뒀안길에서 민중과 함께 가장 헌신적으로 투쟁했던

그들의 활동을 역사의 주류로 평가하고자 한다.

남·북한 민중 모두가 주인되는 자유로운 인간들의 공동체 건설을 위해

버림 받은 역사를 복원하는 것,

날조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행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제1부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평가

- 3·1 운동론과 임시정부론

1 3·1 운동의 역사성

민족해방운동사(이하 민해운)의 거대한 분수령, 전민족적 항일투쟁, 민해운의 대중적 기반 확대, 개항 이후 개화파·농민전쟁의 두갈래 운동이 근대공화주의와 민족자결의 원칙 아래 일정한 수렴.

1) 국민주권 수립운동.

임정은 최초의 공화주의 정부. 정부의 명칭임. 성격도 대한제국이 아닌 대한민국. 근대적인 민족운동의 본격적 전개.

2) 합법적 민족운동 전개에 길을 열.

3) 무장독립운동 전개의 계기. 독립전쟁기지의 형성.

4) 민족해방운동 노선의 전환 :

대중적 정치의식의 고양. 사회주의 운동의 대두와 주도적 위치. 민중들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막연한 전망 "조선독립의 그날에는 재산이 평등하게 배분되기 때문에 빈곤자는 무상의 행복이다" "조선이 독립하면 국유지는 소작인 소유로 된다". 토지의 평균분작이념이 근대적인 사상으로 결합.

민족부르조아지의 지도력과 노선상의 한계.

5) 운동 실천론의 분화 :

독립전쟁론과 실력양성론의 대립과 분화. 비폭력 운동의 한계와 무장투쟁의 본격 전개. 민족주의자와 민족개량주의의 분화.

2 3·1운동론을 둘러싼 몇가지 문제제기

1) '민족대표' 33인의 문제 :

다양성 인사로서 운동폭발의 계기 제공. 민족개량주가 천일로 드러나기 이전의 단계와 부르조아 민족주의적 사상의 융합.

'민족대표'들의 구체적 목표나 전술이 제시된 것은 아님.

※ 33인에 대한 평가의 문제 : 3·1 운동을 계획, 자금공급, 독립선언서의 작성 배포로 기록제. 이들의 결단을 평가하는 데 인색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실제 민중의 움직임이 자신들의 생각을 뛰어넘자 스스로 운동의 지도권을 포기. 역사적 평가는 엄밀한 것.

2) 비무장주의, 무저항주의 개념의 혼동. 민족적 지도역량이나 의지의 결여.

'선언문'의 추상성, 난해성. 조선인 자본가와 농민 노동자층의 구체적 문제 지적 못함. 부르조아 민족주의와 민중적 민족주의(민중)의 역량이 독자적으로 서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 '독립'의 구호 아래 '독립청원' 방식에 의존하는 이중성.

3·1 운동은 부르조아민족운동의 성격을 띠면서도 각계급 계층의 사회 경제적 이해관계와 이념의 차이가 존재. 이후의 분화를 예고. 협동전선의 필요성.

3) 재국주의적 국제질서에 대한 낙관론 :

'청원'주의적 방식. '민족대표'들은 민족자결주의 즉 원순의 '정의감'과 '열국의 자비심', '일본의 이성'에 기대를 걸고 만세시위 준비.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민족대표'들은 조선도 이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을 가짐. 이러한 세계정세를 '세계개조의 신세계'로 인식. 일제에 대한 정면비판 회피.

3 3.1운동론

- (타협적·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남한의 평가

1) 전민족의 대단결에 의한 일제와의 비타협적 투쟁으로 민주공화정체인 대한 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점을 부각 :

"3·1운동은 우리 독립 국가의 先聲이요, 민족부흥의 출발이요, 전민족의 일치단결의 기록이요, 현대민주주의적 각성의 발로" (3·1운동 제 21주년 기념 선언)

"정의 인도의 주장과 민족자결의 표어는 나아가 국제적 공정한 여론의 환기... 애국민적 대단합이 ...완성되니 운동의 신국면이 전개되다" (임정기관지 '독립신문')

"3·1절 이 날은 우리 민족의 노약남녀가 총궐기하여 적수공권으로서 강도 일본과 혁명투쟁을 개시한 날...何故로... 자주 독립의 목적을 아직 달성할 수 없었는가? 그것은 제일로 우리의 혁명역량을 총집중할 수 없었던 것이 중대한 원인" (민족혁명당의 기념사)

2) 민족 개량주의자(실력양성론, 자치론자)들이 일제시대 당시에 이를 어떻게 보았는지는 분명치 않다.

※ 이광수의 '민족개조론'(1921) ...> 갑신정변 이래 계속되어 온 민족운동 즉 개조운동에 대해 준비도 실력도 없이 무모하게 운동을 전개했고 쓸데없이 정치적 색채를 띠므로써 정치적 탄압을 받음 ...> 3·1운

동에 대한 생각도 비슷하였을 것이다.

※ 송진우 : 1920년 출옥 직후, “국제적인 어떤 계기를 얻기 전에는 독립은 어렵게 되었다. 세계정세가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에서 손을 떼게 만들기 전에는 그들은 이 나라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한민족의 독립운동은 세계의 여론을 움직이고 국민 자체의 정신을 계몽하는 데 그칠 뿐 바로 독립을 가져오지 못함이 분명하다” ……> 패배론적 숙명론적 사고

민족부르조아(비타협 민족주의자)가 3.1운동을 통해 자력에 기초한 일제와의 비타협적 투쟁의 필요성을 배운 반면에 민족개량주의자는 타협의 필요성, 즉 민족의 개조와 실력양성의 필요성을 절감.

3) 해방 3년시기 : 민족세력과 반민족세력 간의 정치적 대립, 역사적 정통성과 관련된 문제.

해방후 첫번째 3.1운동 기념집회가 민전(조공, 인민당, 신민당, 조선혁명당, 천도교청우당, 임정계)의 남산집회와 임정의 범통을 계승했다는 대한국민대표 민주의원(미군정의 최고 자문기관)의 동대문운동장 집회(47년 행사도 양분, 이때는 동대문집회에 김구, 러치 등 미군정 참가로 공식 인정)로 양분.

※ 이승만, 한민당 등의 평가 : 3.1운동을 승리한 운동으로 평가.

- (1) 우리 민족의 자주적 독립의 역량을 세계에 알렸고
- (2) 그 결과 연합국으로부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해방의 약속을 얻게 되었으며
- (3) 민족의식의 고양
- (4) 고양된 민족운동 과정에서 임정 수립
- (5)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분적으로나마 성취할 수 있었다는 점
- (6) 신문화운동 계몽운동 등이 촉발.

※ 1946년 3월 1일을 전후하여 이승만과 한민당측이 제안한 ‘민족대단결론’과 ‘임시정부 범통문’ ……>

- (1) 3.1운동의 위대한 의의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전민족이 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에 있으므로 현재의 우리들도 이 정신을 계승하여 계급간의 대립, 정치세력간의 반목을 과감히 청산하고 대동단결해야.
- (2) 임정은 3.1운동의 독립정신과 민주주의적 정신을 계승한 구헌체이므로 그 범통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므로 자신들이 정국 타당성 강조.
- (3) 3.1운동 임정 등을 통해 우리의 독립의지와 역량을 이미 세계만방에 과시한 바 있으므로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타치안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 ‘대동단결론’의 허구 ……> 상당수 지주, 대관적 지식인들은 3.1운동에 반대. 역사적 자산에 대해 일부 ‘명망가’들이 3.1운동 성과를 사유화,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소재거리.

이후 남한에서는 3.1운동에 대해선 관련 편의 공식적인 연구발표는 없으나 대통령경축사나 각 신문의 사설 등을 통해서 볼 때 1948년 단독정부 수립을 합리화하는 주요 근거. 3.1운동을 통해 제기된 민족대단결의

사상과 민주주의 이념은 식민지 민족독립운동의 주류적 사상 이념이었으며 대체로 이러한 사상과 이념이 1919년에 수립된 임정, 대한민국정부로 계승 발전되었다고 파악. 반공통일론, 조국근대화론, 10월유신과 새마을운동의 사상, 반독재 운동에 대한 ‘대동단결론’으로서의 이념적 근거.

4 임정범통론의 문제

1) 범통론적 역사해석과 분단체제

임정범통론은 분단체제하에서 한국 현대사 인식의 교리 역할. 민주적 합의에 기초한 권력의 정통성 문제 보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계승되었다는 식의 전근대적인 정통성론. 남북한은 한국현대사에 대한 배타적이고 당위론적인 정통성론을 같이 주장. 남북한은 각기 (집권)체제의 정당성과 우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식민지시기 및 해방후 민족운동을 자의적으로 해석. 서로 다른 정통성론의 배후에는 정통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적 토대가 취약한 증거.

2) 북한의 정통론적 현대사 인식

한국현대사의 기점을 수령(김일성)의 영도가 인민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설정. 김일성의 대중적 영도가 관철되기 시작한다는 1926년의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부터 한국현대사 시작. 근현대사의 다양한 사실조차 각급 교육기관에서 제대로 교육받을 기회 봉쇄. 그들대로 편향적인 역사인식. 분단체제의 사상적 장벽.

3) 남한 역사학계의 임정범통론

임정이 배타적으로 설정. 독립운동 전개도 임정 주도로 이해. 임정은 “식민지 민족독립운동의 총지도부이자 임시적 정권기관” 역할을 수행했지만 사회주의자들은 민족운동보다 계급투쟁을 주장하면서 민족의 통일과 단결을 저해했다고 본다. 임정 등 우익의 활동을 제외한 다른 세력의 민족운동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조차 부인하는 경향. 편향성.

“식민지에서의 해방이라는 근본 명제는 8.15 해방까지 사회주의에 기본적인 제약을 주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민족주의에 사회주의적 경향을 자극해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민족운동은 민족적 사회주의, 사회주의적 민족주의의 색조가 진작부터 짙었고 이러한 상호영향의 요소 때문에 해방 전까지의 공산주의운동은 민족해방운동사에서 제외될 수가 없는 것이다.”(조지훈, 『한국문화사대계』 1,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64, 737-738쪽)

임정범통론에 대한 비판적 입장과 임정 자체의 부정적 평가는 구분되어야. 20-30여년동안 해외(중국 관내)에서 고생한 임정 인사의 활동이 과소평가되어서도 안되지만 임정만이 과대평가될 때는 다른 정치적 목적이 개재.

4) 임정법통론의 타당성 문제

- (1) 정부 명칭에 걸맞게 독립운동을 실질적으로 지휘 영도하였는가.
- (2) 임정 구성원이 제1공화국의 주요 구성원으로 인맥적으로 연결되는가.
- (3) 임정(구성원)의 사상 또는 정책방향이 제1공화국으로 이어졌는가.

5 분단체제의 극복을 위한 역사인식

8.15를 주관적으로 또는 남북한의 다른 정치적 목적에서 해방 또는 승리에 따른 개선으로 규정짓는다고 해서 분단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해결은 냉정한 현실진단에서 비롯되는 어느 특정집단에 대한 해개모니 또는 정통성의 설정은 독립운동 당시의 객관적 상황 또는 주체적인 역량면에서 설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오늘의 시대를 분단시대라고 보는 것은 분단이 각 방면에서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해를 끼치고 있고 분단체제는 극복되어야 한다는 시대인식. 이질화된 남북한의 역사인식 특히 현대사의 정통성론 또는 법통론은 분단극복보다는 분단체제를 옹호하거나 당연시하는 분단고착적 사고를 대중(인민)들에게 각인시켜 주거나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대결의식을 높이는 역기능. 분단체제의 극복은 이질화된 역사상에 대한 재인식에서 출발.

8.15 후 분단시대를 민족운동사의 측면에서 보면 곧 민족통일국가 수립운동의 시대이며 그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극복을 위한 운동은 이미 8.15 이전의 민해운 과정에서도 꾸준히 계속되어 왔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통일민족국가 수립운동이 식민지 시대에서 분단시대에 걸친 민족운동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강만길, 『통일운동시대의 역사인식』, 서문

제 2 부

민족주의의 환상을 딛고 공산주의로 (1919~1924)

1 조선노동총동맹

- 식민지 노동자·농민 계급대중운동의 결실

"23일은 비람도 몹시 불거니와 일기도 매우 쌀쌀한데 거리의 이곳 저곳에서는... 파업노동자들의 뒤를 쫓아다니는 순사의 때가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자못 험악한 기분에 빠져, 언제 어느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동아일보』 1929년 1월 27일자 보도하고 있는 원산 시내의 모습이다.

한 조선인 노동자가 일본인 악질 감독에게 구타당한 사건으로부터 발단되어, 당시 일제와 자본가 계급의 살인적 착취에 대항한 원산지역 노동자 수천명의 대규모 투쟁으로 불붙었으며 전국각지는 물론 일본, 중국, 프랑스, 소련 등 세계 각지 노동자들의 지원과 격려를 불러일으켜 한국역사상 최대의 노동쟁의로 기록되었던 원산노동자 총파업. 비록 일제의 살벌한 탄압과 강력했던 지도부의 제거로 인해 실패로 끝났지만, 원산 총파업은 그 전개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노동자들의 조직적인 행동과 철저한 비타협적 투쟁으로 향후 식민지 조선의 노동자계급운동의 전도를 밝게 비추었던 역사적 사건이었으며 1920년대 당시 식민지 노동자계급 대중운동의 발전정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1) 일제에의 구결로 치달았던 20년대 부르주아 민족운동

1922년 이광수는 『개벽』지를 통해 이른바 '민족개조론'을 천명한다. 그것은 조선인은 허위와 공상과 공론만 즐기고, 게으르며 서로 신의와 충성이 없기 때문에 조선민족의 성격을 그 반대방향으로 개조하자는 것이었다.

이 '민족개조론'은 나아가 '자치론'으로까지 발전되는데, 당시 『동아일보』에 사설로 발표되었던 그의 글 '민족의 경륜'에 따르면 조선인은 일본의 통치권을 승인하고 일본이 조선 내에서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정치적 결사를 조직하여 참정권·자치권을 얻어내기 위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는 독립청원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으로까지 나아간다.

여기서 보여지는 바대로 이 당시 부르주아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었던 민족운동은 이미 그 반동적·반민족적 본성을 스스로 드러내고 일제에 구결하는 양상을 띠게 되는데, 우리는 이를 총칭해 '민족개량주의'라고 부른다. 민족개량주의는 일제의 문화정치가 의도한 분열통치에 특특히 기여했고 이후 노동자·농민 계급운동의 분출 속에서 그 역사적인 종말을 고하게 된다.

2) 『조선노동총동맹』이 창설되다.

"1/ 오인은 무산계급을 해방하여 완전한 신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2 오인은 단결의 위력으로써 최후의 승리를 얻는 데까지 철저히 자본가계급과 투쟁한다/ 3 오인은 노동계급의 현 생활에 비추어 복리증진 및 경제적 향상을 도모한다."

이것은 1924년 4월 18일 가맹단체 181개, 출석대표 295명으로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시킨 <조선노동총동맹>의 강령이다.

<조선노동총동맹>은 1920년 결성된 <조선노동공제회>로부터 1922년의 <조선노동연맹회>, 1924년 전라도·경상도지역을 포괄하는 <남선노동총동맹> 등으로 이어져 온 식민지 조선의 노동자·농민 계급대중운동의 총결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국의 노동자·농민조직을 거의 총망라한 전국조직이었다. 또한 노농총은 출범부터 조선의 노동자·농민운동이 무산계급 해방운동 노선임을 명시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식민지 조선 민족해방운동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국내 공산주의 운동의 성과에 힘입은 것이었으며 또한 1920년대 노동자·농민 계급 대중운동의 급격한 발전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시 노농총은 임시대회를 통해 민족개량주의 사상을 선전하던 『동아일보』 불매운동을 결의하기도 하였는데, 이때문에 동아일보의 전 중역이 사표를 낼 만큼 정치세력으로서의 노농총의 위세는 상당한 것이었다.

3) 노동자·농민운동의 분출

노농총이 이렇듯 강력한 힘으로 결성될 수 있었던 데에는 1920년대 격렬하게 터져나왔던 노동운동의 성과에 힘입은 바 크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1921년 9월의 부산 부두운반 노동자의 총파업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1920년대 초기에 일어난 가장 대규모적인 파업이었다.

1921년 들어 자본가들이 임금을 30%나 내리자 5천여 명의 부두 노동자가 결속하여 총파업을 결행하게 된다. 이 파업은 일제와 자본가들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10여일 동안이나 계속되어 그 결과 임금을 10~15% 인상하기로 합의하여 승리로 끝났다. 이 파업은 당시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노동단체 결성 움직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으며 당시 활발했던 노동야학 교사들의 조직활동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전해진다.

20년대 초반의 노동운동의 급격한 분출은 이밖에도 많은 투쟁사례들을 만들었는데, 1922년 11월의 경성 인력거꾼 파업, 같은해 12월의 경성 양화직공 파업, 1923년 3월 평양 양말공장 노동자 파업, 1924년 3월 군산 낙합정미소 파업 등이 그것이다.

4) 직업별 노조 전국연맹체의 형성

192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조선의 노동·농민운동은 질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1927년 8월에는 노농총이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농민총동맹>으로 발전적인 분립을 하게 되는데 이는 당시 계급대중운동의 발전이 요구하던 조직운동의 질적 비약을 반영한 것이었다.

당시 노동운동의 발전은 지역별 연맹체의 수준을 거쳐 직업별 노동조합 전국연맹체의 결성으로까지 이어지는데 이것은 일제의 탄압으로 인한 <조선노동총동맹>의 실질적인 무력화로 인한 공백을 채워주는 것이었다. 1927년 대동인쇄주식회사 동맹파업의 예는 이러한 상황을 드러내 주는 것으로 직업별노조 전국연맹체의 실질적인 지도능력이 발휘되고 있음을 드러내 주는 것이었다.

조선의 계급대중운동은 1920년대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의 가혹한 수탈계획의 진행과정 속에서 점진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이것은 1930년대 노동자 계급의 본격적인 출현을 예고하는 역사의 서막이었으며 1929년의 원산총파업은 그 개막선인일 따름이었다. 그리고 이 광범한 대중운동은 식민지 조선 민족해방투쟁의 본류인 국내 공산주의 운동의 자생적·의식적 발전과 불가분의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이제 공산주의자들을 본격적인 역사의 무대 위로 등장하게끔 만들었던 것이다.

2 두 개의 고려공산당

- 조선 공산주의 운동 최초의 불씨

1) 극동 시베리아의 조선인들

가혹한 일제의 탄압을 피해 극동 시베리아로 몰려들었던 많은 조선인들은 세계를 뒤흔드는 정치적 격변을 접하게 된다. 1917년 10월 혁명! 러시아 노동자들은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피억압자의 손으로 억압자의 정부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정권을 선포하였다. 이 위대한 승리는 단지 러시아 노동자들만의 것이 아니었으며 전세계 노동대중에게 계급 해방의 희망을, 제국주의의 지배 아래 신음하고 있던 피억압 민족들에게 민족해방운동의 불빛을 비춰주는 등대가 되었다.

당시 극동 시베리아의 조선인들은 애국적 경향의 봉건지주 출신인 망명정치가이거나, 노동자·농민 출신으로 의병운동에 가담했다가 일제에 의해 쫓겨온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노동자·농민 출신인 대다수 조선 이주민들과 진보적인 인텔리들에게 민족해방운동은 일제로부터의 해방뿐만 아니라 봉건적 질서와 착취로부터의 해방까지를 의미했다. 그들은 볼셰비키의 지도 아래 극동지방에서의 혁명운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조선의 독립이 단순한 민족 자주의 쟁취가 아닌 일제의 계급질서를 폐지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공산주의적 자각을 하게 된다. 소비에트의 피억압 민족의 해방에 대한 약속은 파리강화회의에서 다른 강대국들이 보여주었던 조선독립에 대한 무책임과 대비되어 재 러시아 조선인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게 된다. 이제 조선인들은 그들의 동맹국을 소비에트에서 찾게 되었으며 자연스레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후 조선에서의 맑스-레닌주의 운동의 시작이

주로 인텔리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단체운동이었다면, 이곳 극동 시베리아에서는 볼셰비키 운동에의 실제적 가담으로, 혹은 실물적인 무장투쟁의 준비과정으로 시작되었다. 소비에트의 아낌없는 지원과 일찍부터 형성된 공산주의 운동의 전통은 이곳 극동지방을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안정적인 해외기지로 만들었다.

2) 두 개의 고려공산당

극동에서의 한국 공산주의 운동은 두 개의 상이한 정서를 가진 집단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는 조선에서 이른바 독립운동을 하다가 시베리아로 망명하면서 사회주의 운동을 접하게 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로 무장투쟁에 대한 소비에트의 전폭적 지원 약속을 조건으로 공산주의 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사실상 공산주의자라기 보다는 비타협 민족주의자에 가까웠으며 때문에 이후 많은 사회주의자들로부터 맑스-레닌주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소부르조아 민족주의'라는 비난을 듣기도 한다.

이동휘는 1918년 5월 10일 하바로프스크에서 김립, 박진순, 한형권 등과 함께 조선인 최초의 공산당인 <한인사회당>을 창립하였고, 1921년 5월 20일 상해에서 김철수, 장덕수 등의 <사회혁명당>과 통합하여 이동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고려공산당(보통 상해파 공산당이라 불리움)>을 창립하게 된다. <고려공산당>은 코민테른 2차 대회에 '박진순'을 파견하여 대표연설을 하게 하는가 하면 레닌과 만나 현시기 조선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이 아닌 민족혁명임을 지시받고 민족통일전선으로 '임시정부'의 조직을 위해 투쟁한다.

반면에 일찍부터 러시아에서 태어난 한인 2세로 러시아 혁명에 참여했던 '철저한' 볼셰비키들로서 <상해파 공산당>과는 달리 극동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을 러시아혁명의 '일부'로 사고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주로 옴스크- 이르크츠크에서 활동하였던 이들은 1919년 1월 22일 러시아 공산당 이르크츠크당 산하에 조선인 지부를 결성하였다. 그 지부의 지도자는 남만춘, 김철훈, 오하목 등으로 이동휘의 <한인사회당>이 상해로 옮겨가자 1919년 9월 5일 <전러시아 한인동맹>을 결성하고 이듬해 7월 <전러시아고려공산당>으로 개칭한다.

이러한 두 '고려공산당'의 상이한 민족해방과는 전혀 무관한 러시아의 볼셰비키들로 여겼고 이르크츠크파에게는 <상해파 공산당>이 단지 민족해방을 위해 공산주의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양파의 대립은 21년 봄 '상해임정'의 우경화와 내부의 노선갈등으로 공산주의자들이 탈퇴함으로써 더욱 격심해진다. '상해임정'에서 민족주의자들과의 동거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던 젊은 사회주의자들은 이동휘 계열을 떠나 이르크츠크파에 '결합'하게 되고, 이동휘 계열은 젊은 공산주의자들의 대거 이탈로 그 사회주의적 성격이 점차로 탈각되어 명망을 잃게 되며, 양파 정치분자들의 집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반면 이르크츠크파는 이동휘 계열에서 이탈한 수많은 조선의 젊은 공산주의자들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운동의 단계에 들어설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된다. 한인 볼셰비키의 정통 공산주의자의 정서가 이후 조선의 공산주의혁명을 담당할 조직적·인적 기반을 가지고 있던 이들에게 이전됨으로써 실제 한국의 공산주의 운

동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이르크츠크파에 결합하게 되는 김재봉, 김찬, 조봉암, 박헌영 등은 이후 조선공산당 결성의 주도적 임무를 담당하게 된다.

3) 고려공산당의 해산과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시작

양파의 분열은 해를 거듭하면서 더욱 심각해져서 코민테른에 각자의 분파가 유일한 조선인 공산당임을 인정 받기 위해 대표를 파견하고 서로에 대한 비방을 하기도 한다. 서로에 대한 불신은 1919년 모스크바에서 한인사 회당에 지원한 40만원의 자금을 이르크츠크파가 탈취하는 이른바 코민테른 자금 강탈사건, 21년의 '자유시 참변' 으로까지 격화되기도 한다. 코민테른은 두 세력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양당의 통합대회를 명령하기도 하지만 결국 23년 1월말 양 고려공산당을 해체하고 러시아 공산당 극동총국 내에 고려국을 둠으로 서 지속된 파벌투쟁을 종결짓게 된다. 이제 극동 시베리아에서의 한인 공산주의 운동은 조직적으로 자신의 조직 원들을 입선시키게 되며 3.1운동 이후 폭발적인 계급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조선에 공산주의 운동의 씨앗을 뿌리 게 되는 것이다.

많은 역사 서술에서 두 개의 고려공산당은 주로 그들의 분파투쟁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기술은 대개 극동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이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시원으로 서 조선공산당의 분파성과 파당성을 강조하려 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극동에서의 두 개의 고려공산당의 운동은 러시아의 혁명경험과 코민테른의 지원 이 조선혁명으로 이전되는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전사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특히 조선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이 조 선국경으로 한정될 수 없으며 만주와 극동, 일본 등 해외까지 확장하여 파악해야 한다는 점과 이 시기 극동에서 일제에 맞서 투쟁하다 산화해 간 선배 공산주의자들의 불굴의 혁명투혼을 되새겨야 한다는 점에서 극동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은 더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3 20년대 사상단체 운동

- 맑스주의 사상의 불꽃을 피워올리다

1922년 2월 4일자 조선일보에는 『조선 노동자 계급에게 격(檄)함』이라는 제하의 '동우회 선언문'이 게재되었 다. '조선고학생동우회'라는 일본 유학생 단체가 귀국하면서 발표한 이 선언문에서는 고학생노동자 구제단체 성격 에서 벗어나 이제는 계급투쟁의 직접적인 행동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을 천명하였다. 대외적으로 계급투 쟁을 표방한 최초의 문건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 '선언문'은 20년대부터 조선 내에서 조직되기 시작하였던 수많은 노동·청년단체들의 사상적 지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었다.

1) 맑스주의 사상의 광범한 보급

1919년 3.1운동의 여파로 조선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화해할 수 없는 조선 민중의 투쟁 정신은 이제 저항이 아닌 일본제국주의의 지배를 파탄낼 전국적 조직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20 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제국주의 자본의 본격적인 유입으로 노동자계급이 형성되고, 일제의 농민 수탈강화로 소 작쟁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던 조선에서는 민족해방운동의 주체로서 노동자·농민이 우뚝 서기 시작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민족해방운동의 주체의 전이는 그들 주체의 독자적 사상이념을 필요로 했다. 조선의 노동자·농민들은 제국주의 국가간의 식민지배분할 정책일 뿐인 월슨의 '민족자결주의'나 파리강화회의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노동 자·농민 스스로 혁명을 완수하였던 러시아 노동자 국가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사상·이념과 지원에 관심을 가지 게 되었다. 이제 사회주의 사상은 조선 사회운동의 사상적 기초로서의 객관적 배경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조선 의 젊은 지식인과 청년들이 이러한 노동자 계급 사상의 전파자였다. 그들은 21년부터 사회주의 이념을 연구·보급 하는 사상단체를 결성하기 시작했고 그 숫자는 200여개에 다다랐다. 그들은 "농민단체, 노동단체를 결합하고 단 체의 위력에 의한 지주 및 자본가에 대항하여 노동자계급사회를 실현한다."라는 선언을 강령에 새겨넣기도 하였 다.

앞에서 언급한 '동우회선언'을 계기로 국내 사회주의 단체의 조직활동은 활성화되는데, 서울청년회를 비롯해 여 신생활사(1922.1), 무산자동지회(1922.1), 토요회(1923.5), 신사상연구회(1923.7), 조선노동당(1924.8) (창립일준서) 등이 그 대표적 단체이다. 이러한 사상단체의 조직은 일본에서도 진행되어, 일본공산당 학생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던 일본유학생들이 방학을 이용, 귀국하여 조선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에 헌신하게 된다. '조선고학 생동우회'의 창립멤버였던 김약수 등은 조직내 무정부주의와 결별하고 동경에서 '북성회⇒일월회'를 조직하였고, 같은 해 경성에서 '북성회'의 국내본부로서 후일 '신사상연구회'와 함께 조선공산당창립의 주요한 역할을 하는 '건 설사⇒북풍회'를 조직하였다. '신사상연구회'는 홍명희, 홍중식, 구연홍, 김찬 등과 '무산자동지회'의 윤덕병, 이 준태, 원우관, 박일병 등의 발기로 조직되었으며 후일 1차 조선공산당 창립에 참여하고 '고려공산청년회(이하 공 청)'의 결성을 주도한 박헌영, 김단야 등을 영입하여 맑스의 생일인 화요일을 본따 1924년 11월 19일 '화요일' 을 조직한다. 이처럼 조선에서의 사회주의 사상단체들의 활동은 1922-23년을 계기로 대단히 활발해졌고 아직은 초보적 수준이었지만 국내 맑스주의 사상과 이념의 연구·보급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

2) 사상적 분파의 형성

1> '북풍회'라는 명칭은 '북풍(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의 기운)이 한번 불면 빈대나 모든 기생충이 다 날아가 버린다'는 속담에서 비롯되었다 한다.

조선에서의 사상단체의 발전과 함께 사회주의 운동세력의 내부에는 '서울청년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서울계'와 '화요파', '북풍회'를 중심으로 하는 '화요계'로 대별되는 사상적 분파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서울계'는 극동지방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의 두 개의 분파중 하나인 이동휘 계열의 '상해파'와 연결하여 '서울-상해파' (이하 서상파)를 형성한다. 반면 '화요계'는 '이르크츠크' 계열과 관계하는데, 이는 극동에서의 분파 형성(민족주의 對 불세비키즘)과는 다른 양상을 가진다. 이동휘에게 모스크바 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바 있는 장덕수(당시 동아일보 주간)를 중심으로 구성된 '조선청년연합회'에서 분립해 나온 '서울청년회'는 일찍부터 상해파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 조선내 잠입하여 '화요회'를 장악했던 '이르크츠크파'는 '북풍회'와 통합하여 '화요계'를 이루었다. 이렇듯 '서울계'와 '화요계'는 극동지방에 서로 다른 지지세력의 후원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는 단지 서울파와 화요파의 대립에 극동에서의 '상해파'와 '이르크츠크파'가 참여한 것이며 극동지방에서의 대립의 관계가 조선으로 이전된 것은 아니었다.

코민테른 고려국에서 파견된 기관원들이 국내에 잠입하여 국내부를 결성하고 서울지역에서 노동·청년조직을 획적으로 통합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서울청년회 계열은 이를 거부하고 만다. '서울 청년계'는 서울지역에서 가장 큰 조직인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이 아닌 획적 통합에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 '서울계'의 이러한 패권주의에 결국 국내부는 '화요계'에 참여하여 이를 중심으로 조선공산당을 건설하게 된다. '화요계' 중심의 당건설은 '서울계'의 불참으로까지 이어지고 이후 '서울계'는 독자적인 '춘경원당'을 건설하게 된다. 이것은 이후 조선공산당 내 끝없는 분파 투쟁의 시작이었고, 28년 조선공산당의 해체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3) 20년대 사상단체 운동의 의의

20년대 사상단체의 결성이 이후 조선공산당 내 지속적인 분파투쟁의 씨앗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의는 조금도 손상될 수 없다. 초기 공산주의 운동의 국면에서 사상서클의 대립이 문제되지 않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사상서클간의 대립은 그 투쟁을 통해 맑스주의 운동의 심화를 이루어내는 필연적인 경과점인 것이다. 오히려 20년대 사상단체의 결성은 조선내에서의 본격적인 사회주의 운동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며 거기에서 배출된 무수한 공산주의 전사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물론 사상서클들의 소모적 분파투쟁의 오류에 대해 눈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분파의 이익을 위해 전체 공산주의 운동의 대의를 버리는 '패권주의'는 단호히 평가되어야 한다. 계속되는 노동자 계급투쟁에의 동참을 통해 서로의 정서를 일치시키고 진정한 사상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 진지한 공동활동의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당시, 이 과제의 수행을 망기했던 분파 또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각 분파들의 평가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하도록 하겠다. 20년대의 사상단체 운동의 결실로 1925년 4월 17일 마침내 조선공산당이 결성된다.

제 3 부

조선공산당의 창건, 투쟁, 좌절 (1925~1928)

1 조선공산당 창건

1) 격동하는 반도의 정국

1919년 3.1 민족운동의 흥분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20년대 초부터 조선은 뚜렷한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 外資도입과 식민지 초과착취를 통한 일본자본의 제국주의로의 발전은 이제 과잉자본의 본격적인 조선진출을 시도했으며 조선에서의 식민지공업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다. 20년대 말 조선의 노동자들의 숫자는 이미 공업노동자가 10만에 달하고 있었으며 운수 토건 노동자 50만명, 어린이 여자 노동자가 32만명에 이르게 될 정도였다. 이러한 식민지 공업의 발전은 조선의 민족해방운동을 담지할 “노동자 계급”을 창출해 내었다.

근대적 자본주의로의 발전이 차단당한 채 제국의 필요에 따른 근대화만을 강요당했던 조선의 노동자들은 봉건적 예속관계의 잔재 속에서 노예적 착취에 혹사당하고 있었다. 그들은 피로, 영양실조, 폐결핵 등으로 쓰러져 갔고 죽은 동료들 땅에 묻지마자 기계 앞에 다시 묶이였다.

아직까지 조선의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었던 농민들도 마찬가지였다. 대다수 조선의 농민들은 소작농이었으며 생산량의 60% 이상을 소작료로 착취당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조선 노동자, 소작농의 폭발적 증가와 그에 따른 착취도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노동쟁의와 소작쟁의를 일으켰다. 일제의 가혹한 착취에 맞선 조선 노동자, 농민들의 저항은 그 규모나 횡수에 있어서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21년 9월의 부산 부두운반 노동자의 총파업은 자본가의 30% 임금삭감에 맞서 5000여명이 10여일 동안의 단결된 투쟁으로 임금 10~15% 인상의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으며 23년 ‘임금 인하 반대’와 ‘인권을 모독하는 갑독 파면’을 요구하는 경성 광화문 밖 4개의 고무공장 여직공 150명의 동맹파업도 10여일간의 투쟁을 통해 요구조건의 완전 관철을 이루어 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선 반도의 일제에 대한 저항의 기운은 이미 과거의 자생적인 수준을 뛰어넘고 있었다. 새롭게 형성된 민족해방운동의 주체인 식민지 노동자 농민들은 감상적인 ‘민족독립의 정서’를 뛰어넘어 일제의 경제침탈 분쇄와 노동자 농민이 주인되는 새로운 근대국가 건설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들은 자신의 운동을 이끌어낼 뚜렷한 민족해방의 사상과 이념을 필요로 했으며 또한 전국적 운동을 이끌어낼 ‘최고지도조직’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일찌기 수많은 사상단체에 의해 조선내에 유입된 ‘노동자계급해방의 사상’은 이제 일제의 착취를 폐절할 현실의 운동으로 전화하였던 것이다.

2) 민족해방운동의 총결산, 조선공산당 창건

수많은 검거를 뚫고 코민테른 조직국(Org-buro)에서 파견된 김재봉, 김찬, 신철 3인은 조선내에서 국내부를 조직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들은 곧바로 조선내 민족해방운동의 전위당인 <조선공산당>을 결성키 위한 사전계

획으로 ‘전조선 민족운동자 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다. 이들은 25년 1월 중순경부터 4월 상순경까지 대구, 해주, 평양 등지를 순회하면서 ‘대회’의 취지를 설명하는 동시에 은밀히 <조선공산당> 창건에 함께할 동지들을 규합하는 데 전력을 다한다. 이들은 4월 15일부터 3일간 표면상으로는 ‘전조선 기자대회’를 내세워 은밀히 <조선공산당> 창건을 준비한다.

이러한 위장전술이 주효하여 1925년 4월 17일 울지루에 있는 중국요리점 ‘아서원’에서는 <조선공산당> 건설을 위한 대회가 시작된다. 김약수의 사회로 시작된 이 대회에 참여한 각 성원들은 국내외에 상주하고 이는 사회주의자들의 운동의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모두 공유하고 운동의 통일적 지도체 건설에 동의한다. 김약수의 개회사에 덧붙여진 발언에서 김재봉은 “조선에서 있어서 사상운동이 나날이 복잡해져 가고 있으므로 이것을 지도할 조직을 결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전조선의 사상단체를 지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목적을 보다 분명히 밝히고 <조선공산당(이하 조공)>을 창건할 것을 모든 성원의 결의로 선포하였다. 한편 다음날 박현영의 집에 모인 젊은 청년들은 그의 주재 아래 김단아가 강령, 규약을 낭독하고 박현영을 책임비서로 하는 1차 <고려공산청년회(이하 공청)>을 창건한다.

2 공산당의 투쟁과 해산

공산당창건 이후 식민지 조선의 민족해방운동은 이론의 영역에서 실천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조공은 일제에 의한 4차례의 대규모 검거와 28년 코민테른에 의해 해산명령이 내려지기까지, 11만의 회원을 가진 조선노동총동맹, 1,092개 단체가 소속된 조선청년총동맹, 기타 사상단체들에 세포를 조직하여 주요운동단체들에 대한 실질적 지도력을 높여나갔으며 1차 조공의 ‘전조선민족운동자대회’ 개최금지 반대투쟁(책임자 조봉암), 2차 조공의 ‘6.10 만세 시위’ 조직(책임자 권오설), 3차 조공의 신간회 건설, 4차 조공의 ‘광주학생운동’ 지도 등 수많은 대중시위를 조직해 나갔다. 그동안 지역성과 자생성에 머물러 있었던 식민지 조선의 민족해방운동은 조공의 창건과 함께 전국적 조직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동안의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의 총결산인 조공은 여러 한계도 가지고 있었다. 여러 사상단체들의 통합으로 이루어진 1차 조공 건설은 혁명적 노동운동을 통해 단결된 조선의 프롤레타리아트의 전위적 분자들의 조직으로서의 당으로 발전하지 못한 채 해산되고 말았다. 조공의 핵심성원들이 인텔리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등 내부에 항상적으로 파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으며 4차에 걸친 검거를 통해 조직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단절되는 등 비밀활동에 있어서의 일정한 무능력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이 조공이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의 주체인 기층 노동자, 농민들과 무관한 ‘인텔리 집단’에 불과하다는 ‘악선동’을 입증해줄 수는 전혀 없다. 28년 해산까지 조공은 기층 노동자, 농민들의 전국적 대중투쟁의 분명한 지도조직이었으며 기층 대중들의 광범한 투쟁 속

에서 스스로 단련받아 온 노동자, 농민의 당이었다. 또한 4차에 걸치는 조공의 운동은 이후 민족해방운동에서 일제와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이끌어온 사회주의 운동가 자신의 과거활동으로서 혹은 선배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의 역사로서 저항의 36년을 이끌어온 최고의 목적이기도 했다. 28년 당해산 이후 끈질기게 추구되어 온 당재건 운동의 역사나 해방 이후 건설된 공산당을 '재건' 공산당이라 일컬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25년 창건에서부터 28년 해산까지의 <조선공산당>의 역사는 식민지 조선의 '노동자 계급'의 발전과 '계급운동'의 진전이라는 객관적인 요구에 부응해 온 역사이다. 또한 그것은 식민지 조선에서의 치열했던 선배 공산주의 전사들의 투쟁과 피의 역사로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지표로 자리잡을 것이다.

3 6.10 만세운동

조선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순종의 인산일인 1926년 6월 10일 오전 8시 반경, 순종의 大喪가 종로 3가 단 성대 앞을 막 지나가자마자 일제의 봉쇄망을 뚫고 한 청년이 뛰어나왔다. 조선공산당의 학생단체였던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이하 조과연)』 간부인 이선호의 선동이 울려 퍼졌다. '형제여! 자매여! 최후까지 싸워 완전독립을 쟁취하자! 혁명적 민족운동자 단체 만세! 조선독립만세!' 그의 외침과 함께 군중은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이현상, 이동환 등의 청년학생이 중심이 되어 여기저기에서 수천장의 유인물과 태극기가 뿌려졌다. 학생들과 시민들은 순사들에게 먹살을 잡히고 발로 차이면서도, 혹은 먹살을 뿌리치고 버티면서 만세를 불렀다. 삼시간에 일제의 군화발이 쏟아지더니 4-50명이 연행되었다. 이윽고 관수교 부근에서도 유인물이 뿌려지고 만세가 울려 퍼졌다. 황금정의 3차 시위는 부근의 사범학교 담이 무너질 정도로 치열했다. 훈련원(동대문운동장) 서쪽 일대에서는 시대일보사 배달원 김낙환의 선동으로 시작되어 이전보다 조직적이고 완강한 시위가 벌어졌다.

6월 10일을 전후하여 지방에서도 분산적인 투쟁이 진행되었다. 인천의 만국공원, 순창, 병영, 통영, 원산, 개성, 홍성, 전주, 신천, 평양, 마산, 공주, 하동, 당진, 구례 등에서 산발적으로 이어졌다.

이들의 시위로 전국에서 5000여명이 연행되었으며 일제의 야만적 폭행으로 160여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하였다. 19일에는 일경이 중앙고보에 난입하여 수업을 받고 있던 학생 19명을 시위주동 혐의로 연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교사 조호철까지도 연행했다. 이날 사건으로 만세시위를 조직했던 '조선공산당원' 백여명이 피검되었으며 감옥에서 일제의 고문에 굴하지 않고 법정투쟁을 전개하다가 쓰러져 갔다. 제2차 조선공산당 '6.10 운동지도특별위원회' 책임자를 맡고 있었던 '권오설'은 적들의 야수와 같은 고문으로 옥중에서 살해되었다.

1) 전국적 지도부에 의한 최초의 전국적 대중투쟁

위에서 확인하듯이 6.10 만세시위운동은 30여년간의 조선 민족해방운동사에서 그 규모에서나 전국적인 운동

범위로 보나 3.1만세운동에 버금할 만한 대중투쟁이었다. 물론 조선공산당의 인쇄력문이 미리 일경에게 발각되는 등 그 사전계획이 적에게 유출되면서 투쟁의 범위와 수위가 축소되었음에도 6.10 만세시위운동은 무엇보다도 조선 민족해방운동에서 전국적 투쟁지도부의 계획 아래에서 진행된 최초의 조직된 대중투쟁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일찍이 『조선공산당(이하 조공)』은 전국 각지에서 일고 있는 분산적인 반일계 투쟁을 통일적이고 목적의식적으로 결집시키기 위한 준비에 착수해 왔었다. 26년 5월 2일 조공 중앙집행원회에서는 중앙위원 권오설(당시 고려공청 책임비서 29세)의 제의로 순종 장례일을 기하여 혁명적 시위운동을 벌일 것을 결의하고 '6.10 운동투쟁지도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하였다. 조공 및 특위는 몇차례의 회의를 거쳐 ① 사회주의, 민족주의, 종교계를 망라한 대한독립당을 조직할 것 ② 대한독립당은 우선 6월10일을 기하여 대시위운동을 실행할 것 ③ 시위방법으로는 장례행렬이 지나가는 연도를 따라 시위대를 분산배치하였다가 격고문 및 전단을 살포하며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할 것을 결정하고 6.10시위운동을 준비하였다.

조공과 특위가 통일적인 전국적 결기를 준비했던 만큼 사전준비작업도 치밀했다. 권오설을 이날 뿌려질 격문과 투쟁술로건을 마련하였고 5월 말까지 적들의 감시를 피해가며 격문 및 전단 5만여매의 인쇄작업을 마쳤다. 또한 조직화 사업으로는 박래원이 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호남선, 경부선 방면을 맡았으며 민찬식이 경의선, 경원선 방면의 도시들을 맡았다. 이들의 정력적인 노력으로 전국 58여개의 도시와 연계망을 만들었으며 그 연계망은 주로 각 지역의 당원들과 고려공청회원들의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특위는 일제총독부 학무당국에 의해 이날 순종의 장례행렬이 지나가는 연도에 시내 각 학교 학생들이 배치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조직화 사업에도 착수했다. 특히 학생조직화 사업을 주로 담당했던 조공 산하단체인 『조과연』은 이후 특위가 일제의 침탈에 의해 와해(6월 6일 경)된 이후 실질적인 6.10 만세 시위운동의 지도부를 맡기도 했다. 조공 당원이면서 조과연 간부인 이병립, 조두원, 정달현 등은 학생프락션 작업을 통해 당일 시위학생들을 조직화하였으며 일제의 침탈로 전단이 압수되자 8일부터 밤을 새워 약 만여매의 인쇄물을 재인쇄 하였다. 이들은 아울러 순종 장례행렬이 지나가는 연도에 각 학교 소속 선전선동원을 배치하였으며 인쇄물 배포 책임자를 분담하기도 하였다.

2) 민족해방운동의 질적인 전환

3.1. 민족운동이 타협적 민족부르조아의 지도 아래 대중들의 자생적인 조선독립의 열망과 반일감정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6.10 만세운동은 조선 민족해방운동의 사상이념적 지향을 분명히 하는 『조선공산당』의 지도로 수행되었으며 조선민중의 투쟁의 대상이 '일본제국주의'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조공은 6.10 만세시위에서 배포한 격고문에 "제국주의 군벌에 대한 식민지 민중의 투쟁은 민족적 정치적 해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자본가계급에 대한 경제적 해방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기술하는 등 당면 조선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의 사상·

이념적 지향을 분명히 하고자 노력하였다. 격고문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공은 '제국주의로부터의 완전한 정치적 해방'이라는 당면 민족해방운동에 있어서의 궁극적 지향을 밝히고 있으며 일제로부터의 조선해방의 주체가 무산자 계급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조공은 각 투쟁설로건을 통해 각 계급계층의 요구를 제시하였는데, '일본공장의 직공들의 총파업, 소작인들의 소작료 납부 거부, 언론 집회 출판의 자유쟁취, 수감된 혁명가 석방, 군대와 헌병 철수' 등의 정치경제적 제 요구들과 식민지 노예교육 철폐, 산업등 다방면에 걸친 것이었다.

4 신간회

- 조선공산당이 이끈 '반제민족통일전선'

1) 20년대 민족통일전선운동의 모색

25년, 전제원동의 지도부위원 <조선공산당>을 건설하면서부터 20년대 조선에서는 조선 민족해방운동의 본격적인 과학적 변혁노선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조선공산당(이하 조공)>은 당면 조선 민족해방운동의 과제가 노동계급 및 농민 뿐 아니라 기타 수공업자, 지식계급, 중소부르조아지를 망라하는 광범한 민족혁명전선의 결성이란 보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의 통일전선결성에 박차를 가했다.

3차 조공에 가입한 일월회가 26년 11월 '민족주의자들과 공동투쟁을 할 것'등의 지침을 담은 '정우회'선언을 발표하고 이에 대응해 서울계 '전지회'가 반대 결의문을 발표하면서 촉발된 전국적 논쟁을 통해 민족통일전선론은 구체화되어 갔다.

2) 20년대 민족통일전선운동의 성과 - 신간회 창립과 투쟁

23차 조선공산당에 걸친 민족통일전선운동에 관한 실천과 모색을 마침내 1927년 2월 15일 신간회를 결성하게 이르렀다. 이날 오후 7시 YMCA회관에서는 김준연, 백관수, 신석우, 안재홍 등의 조선일보 간부를 중심으로 시대일보의 홍명희, 기독교계의 이승훈, 천도교의 권동진, 불교계의 한용운, 해외의 신재호, 문일평 등 저명한 민족운동가 27명이 발기인이 되어 신간회 창립대회를 가졌다. 신석우의 사회로 진행된 창립대회에서 발기인들은 ①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함, ②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함, ③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배제함의 3개 강령을 확정하였다. 물론 식민지하에서 감시와 탄압이 심했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구체성을 제시하고 있는 못하는 강령이었지만 발기인들은 이 강령에서 신간회가 공산주의자들과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의 통일전선으로 조선내 일체에 저항하는 모든 투쟁분자들의 연대체임을 확인했다. 특히 ③의 강령에서 신간회는 20년대 문화정치 이후 급속도로 일제에 투항하는 개량적 민족주의 진영에 대한 단호한 반대를 강조하기도 하였는데 이

것은 당시 동아일보의 송진우, 김성수의 '자치주의'의 해독에 대한 투쟁선언이었다.

이렇듯 반제민족통일전선으로서의 자기 위상을 정립한 '신간회'는 창립 초부터 그 전국지회 조직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속도는 27년 12월 27일에 지회 1백개소 돌파 기념식을 가질 정도였으며 30년에는 전국 지회가 386개소, 회원수가 76,939명에 이르렀다. 각 지역의 사회주의자들은 '신간회'에 들어가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냈으며 특히 그 지역의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에 적극 결합하였다.

지역으로 내려갈 수록 사회주의자들의 지도력이 강력했기 때문에 '신간회'의 실질적인 운동은 각 지회의 일상 투쟁이었다. 함남 단천지회는 28년 단천 농민의 사활이 걸린 상묘(桑苗)강제재배 반대투쟁을 지원하였고 평북 지방의 삭주등 강변 7읍의 지회는 독립군이 국경을 왕래할 때 안내를 하는 한편 만주지역의 연락임무를 수행하다 지회원이 구속되기 까지 했다. 이렇듯 헌신적인 투쟁으로 신간회는 곧 대중들의 전폭적 지지 속에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신간회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되자 신간회 결성에 소극적이던 서울계인상들까지 신간회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이미 자치론으로 기울어 민족운동의 전선에서 이탈한 민족개량주의자들인 이광수, 송진우, 김성수, 최린 등도 신간회와 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것을 이들의 정치적 생명이거나 사회적 위신을 고려할 때 신간회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신간회가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으며 대일 전선으로서의 신간회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인식이 확고해졌음을 의미한다.

28년에 들어서면서 중앙본부의 활동도 활발해졌다. 29년 원산총파업 때는 원산지회와 함께 노동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투쟁하기도 했다. 신간회는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각 단체들과 함께 12월 전국적인 민중운동을 일으키려고 하였으나 이를 빌미로 일경의 대대적인 탄압을 받게되었다. 이른바 '민중대회'사건이라 불리는 '신간회' 간부들에 대한 탄압으로 허헌, 홍명희, 권동진, 김병로 등 40여명의 사회주의자들과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검거되었다.

3) 신간회의 해소와 역사적 의의

신간회의 대중적 영향력의 확산에 밀려 신간회에 들어온 민족개량주의자들은 신간회에서의 사회주의 세력의 영향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들은 일찌기 29년 7월 중앙집행위원장 선거에서 허헌이 당선되자 경성지회를 중심으로 노골적인 허헌위원장 반대운동을 벌이기도 했었다. 신간회 중앙본부에서 사회주의세력의 영향력을 거세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던 이들에게 '민중대회'사건은 절호의 기회였다. 이들은 40여명의 핵심간부의 구속으로 사회주의자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제거되자 다른 간부들과는 달리 연행되었다. 곧바로 석방된 김병로를 중앙집행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신간회의 주요 간부직을 장악하였다. 이들은 신간회 중앙본부를 장악하자마자 전국적 민족협동전선으로 비타협적인 반제투쟁을 이끌어 왔던 신간회의 역사를 부정하고 신탁위원장으로 취

임한 김병로가 자치운동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등 계량적 민족주의 운동노선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제 신간회는 더이상 노동자, 농민들 기층계급의 투쟁을 이끌어 내는 투쟁부대가 아니게 된다. 그리하여 30년 12월 6일 지회 중 최초로 부산지회가 “현재의 신간회는 소부르조아적 정치운동 집단으로서 하등의 적극적 투쟁이 없을 뿐 아니라...민족단일당이라는 명분 아래 오히려 노동대중의 투쟁의욕을 말살시키는 폐해를 행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신간회 해소를 주장하였다. 뒤이어 15일에는 신간회 경성 지회가 제 3차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개량적 지도부인 신임 중앙간부를 불신임하고 신간회 해소를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그 뒤를 평양지회, 이원지회등이 잇따랐다. 잇따른 지회의 해소결의에 신간회는 1931년 5월 15일 YMCA회관에서 열린 전국대회에서 43대 3으로 해소결의를 채택함으로써 5년에 걸친 민족협동전선운동의 막을 내린다.

이로써 조선민족해방운동의 변혁노선으로서의 민족통일전선운동은 중단되고 말았다. 당시 신간회의 개량화가 전체운동의 발목을 잡는 심각한 절국이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으나 당시사회주의자들의 현실적 대안 없는 무조건적 해소는 이후에도 오류로 평가되고 있다. 결국 대중적 반제통일전선의 붕괴는 반제투쟁의 주요한 일원인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들의 전일화를 방지할 수 밖에 없게 되며 사회주의자들조차 극히 한정된 노동자 농민조직 속에서 고립무원의 투쟁을 전개할 수 밖에 없었다.

5 조선공산당의 좌절

-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역사의 관문

1) 20년대 조선공산당의 투쟁

3.1 민중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식민지 조선의 노동자계급 운동은 일본제국주의 과잉자본의 식민지 조선으로의 대거 유입으로 말미암아 조선내 노동자 계급의 형성과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20년대에 와서 이미 그 운동의 자생적인 수준을 펼쳐버리기 시작했다. 특히 그것은 조선의 노동자 농민이 민족해방운동의 주체로 나선 이래 대중의 운동이 과학적 변혁의 사상과 이념이 만나면서부터 그리고 전국적 변혁운동의 지도부위를 건설하면서부터였다.

조선의 민족해방운동은 1925년 4월 17일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의 전위당 『조선공산당』을 창건한 이래 그 발전의 발판을 거듭해왔다. 조선공산당은 스스로 민족해방운동의 주체로 나선 조선의 노동자계급에게 민족해방운동의 과학적 노선을 밝혀주었으며 일본제국주의의 축출과 노동자 농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당면의 과제를 전 노동자 계급에 인식시켜 주었던 것이다.

조선공산당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자생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었던 조선 노동자 계급의 전국적 단결을 이루

내는 데 노력했으며 전국적 조직운동의 지도부위로 자리 잡아왔다. 조공은 노동자 계급의 전국적 대중조직 수많은 공개운동단체의 결성에 참여하여 이를 지도해왔다. 특히 3차 조공은 ‘조선노동총연맹’을 ‘조선농민총동맹’과 ‘조선노동총연맹’으로 분리시켜 노동자, 농민운동의 독자적 발전을 도모하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조공은 1차당의 ‘조선민중운동자대회’ 개최금지 반대운동, 2차당의 6.10만세시위, 3차당의 신간회 건설, 4차당의 광주학생운동 등 20년대 폭발적인 대중투쟁들의 명실상부한 지도부였다.

조선공산당의 창건과 투쟁은 조선내 노동자 계급의 형성과 투쟁에 부응하는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끊임없는 투쟁의 결과로 식민지 조선 민족해방운동의 신기원이었던 것이다.

2) 조선공산당 운동의 한계

일제하 『조선공산당』의 운동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다. 조공은 크게 4차에 걸친 일제의 탄압으로 1000여명에 가까운 구속자를 내었으며 때때의 검속 때마다 새로운 지도부를 건설해야만 했다.

일제의 탄압 외에도 조선공산당운동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는 분파투쟁이었다. 창건 당시 20년대 사상단체로부터 거의 모든 구성원을 공급받았던 ‘조공’은 다른 나라의 초기 사회주의운동의 국면에서와 같이 극심한 분파투쟁에 시달려왔다. 일찌기 20년대 초 사상단체 운동의 시기에서부터 형성된 화요파, 서울파, 열혈파 사이의 내부 갈등은 조선공산당 운동의 발목을 잡아왔다. 이들의 분파투쟁은 극심하여 한때 조선공산당의 단결된 대오를 깨뜨리기도 했는데 1, 2차 당에서 배제된 서울파는 2차 조공의 투쟁인 6.10만세시위운동에 불참했으며 3차당 시기에는 당권장악에 실패하자 독자의 공산당(일명 춘경원당)을 만들어 조공의 운동에 대립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파 투쟁의 요소는 아직까지 이론 수준이 미약했던 당시 조선 사회주의 운동의 수준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것이었다. 또한 당시 고도의 일제의 감시망 아래서 공산주의 운동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즉 인맥을 통해 이루어진 것도 파벌형성의 한 요인이자 할 수 있다. 각 분파들은 과거 사상단체 운동시기에서와 마찬가지로 같은 입장을 중심으로 파벌을 형성하였으며 치열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분파투쟁의 직접적인 요인은 조선공산당원의 인적 구성이었다. 물론 20년대 조선공산당 운동은 4차 조공 책임비서를 지내 차금봉 등 혁명 속에서 단련된 노동자 지도자를 배출하기도 했으나 조선공산당원들의 대부분은 사회주의 사상의 학습을 통해 운동에 뛰어들은 인텔리들이었다. 실제로 일제 경찰이 분석해놓은 자료에서 20년대 조선공산당원의 직업은 실제로 육체노동자의 비율은 6.7%밖에 안되었으며 40% 이상이 언론인 등의 지식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무직으로 분류된 사람들—사실상은 지식인—도 30%나 되었다. 20년대의 조선공산당운동은 노동자 계급운동이 초기국면이었던 관계로 아직 치열한 투쟁 속에서 혁명적으로 단련되어 온 노동자 계급으로 충원되지는 못했던 것이다.

3) 조선공산당의 해산과 새로운 운동의 출발

1928년 코민테른은 집행위원회 정치서기국에서 『조선문제에 대한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의 결의』(이하 12월테제)를 채택하고 조선공산당의 해산을 결정한다.

‘12월테제’는 조선 공산주의 운동에서의 가장 큰 장애를 일제경찰의 백색테러와 공산주의자들 내부의 파벌싸움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12월테제는 “...과거 공산장원은 거의 모두 지식계급 및 학생뿐이었기 때문에 당으로서 공산정치의 실현은 고사하고 필요한 조직적 연대의 실행도 곤란하였다...”라고 규정하고 조선공산당의 파벌적 요소가 노동자 농민 대중과 유리된 인텔리운동에서 기인되었다고 지적한다. 이어 코민테른은 조선공산당 내 민주집중제의 원리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12월 테제는 이에 대해 “조선공산주의자는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문제와 의문에 대한 토론은 그들 자신의 출판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또한 때번의 일제의 탄압에 지도부가 한꺼번에 와해되는 사태에 대해 “...주의자가 자주 실패했던 것은 당이 비밀공작을 조직할 줄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맨 먼저 은밀한 행동방법을 채용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조직운동에서의 비밀활동 강화를 다시금 지적했다.

코민테른의 12월테제는 단지 조선공산주의운동에 대한 평가와 해산만을 명한 결의는 아니었다. 코민테른은 30년대 조선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면서 “강철과 같은 조직, 공산당을 재조직”할 것을 요구했다. 12월테제에서 코민테른은 현단계의 조선혁명이 “민족해방을 우선의 과제로 하는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임을 다시 전제하고 당면 목표로 “노동자계급의 지도 아래 그것과 농민의 혁명적 결합을 통해 사회혁명의 과정을 준비하는 노농민주독재(노농소비에트)의 수립을 제기했다.” 그리고 당재건의 방편으로는 ‘노농대중 속으로’의 슬로건을 제시한다. 여기에서 코민테른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노동조합 내 공작과 소작인 및 우 소작인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항을 제차 강조하였다.

12월테제의 해산명령으로 20년대 조선 민족해방운동의 총결산인 조선공산당은 해산하고 만다. 이로써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부단한 당재건투쟁에도 불구하고 결국 조선공산당은 재건되지 못하다가 해방이 되어야 당재건을 이루게 된다. 이후 12월 테제에 입각하여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노동 대중 속에서 부단한 당재건 투쟁을 벌여내지만 ‘통일된 전국적 지도부의 부재’라는 현실은 조선공산주의 운동에 있어 가장 큰 시련으로 남게 되었던 것이다.

제 4 부

민족해방운동의 고양 (1930~1945)

회원 혹은 당원으로 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코민테른의 이러한 지시에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지역간 횡선연락을 금지한 채 각자가 맡은 지역에서 헌신적인 '적색노조운동'을 벌이며 코민테른 전권위원이 파견되어 조선 공산당을 재건하기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코민테른이 직접 지도를 수행한 '모스크바 공대출신'들의 활동들과 조선 각지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던 공산주의자들과 간혹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혁명적대중조직' 노선에 입각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은 마침내 38년 12월 코민테른 전권위원으로 파견된 김단야에 의해 조선내 공산주의운동을 총망라하는 경성콤그룹운동으로 모여 본격적인 당재건운동을 시작하게 된다.

2 30년대 노동자계급 운동의 서막 - 원산총파업

1920년대에 들어와 급격하게 늘어난 조선의 노동자계급의 대중투쟁은 1929년 원산총파업에 이르러 그 폭발적인 위력을 과시한다. 20년대의 여러 사상단체 운동과 대중운동의 성과들은 이미 30년대 폭발적인 노동자계급 대중투쟁을 예고하고 있었으며 29년 '원산총파업'이 그 첫 신호탄이었다.

21년에 건설되어 원산지역에서 무려 36건의 파업투쟁에 개입한 「원산노동연합회」(이하 원산노련)가 주도한 '원산총파업'은 그 규모에서나 지속성, 전국적 연대투쟁의 성과에 있어서 국제노동운동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투쟁이었다. '원산총파업'은 1929년 1월에서 4월까지 75일간 계속되었으며 조선 각지에서는 동정파업이 잇따랐다. 특히 일본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준비회에서는 중국, 프랑스, 소련의 블라디보스토크 노동자들의 격려 전문이 도착하기도 했다.

1) 원산총파업의 발단과 경과

원산총파업의 발단은 1928년 9월 함남 덕원군 문평리에 있는 라이징 선 Rising-Sun 석유회사의 한 조선인 노동자가 일본인 감독에게 구타를 당한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되었다. 조합원 120명은 감독파면, 최저임금제 실시, 해고수당제 실시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시작하여 승리하였고 요구조건을 수락할 것을 전제로 한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가지기로 했다. 그러나 약속한 3개월이 지나 이행을 거부한 회사에 맞서 1월 14일 160여 명의 파업으로 원산총파업은 시작된다. 원산노련의 지도에 따라 문평제유 공장의 파업에 부두노동자 60여 명이 임하작업을 거부하자 회사측은 부두노동자를 해고시키고 국제운수주식회사의 사무원을 고용하여 교체했으나 그들까지도 동정파업에 가담하였다. 원산지역 자본가들의 단체인 원산상의는 원산노련의 회원을 고용하지 않겠다고 협박했으며 함흥연대에서 일본군 300여 명이 원산으로 급파되었다. 총파업 직후인 24일 일본군 300여 명과 제향군인 400여 명 및 1천명의 소방대원이 창검과 철포로 무장하고 시가행진을 하여 마치 계엄령을 방불케 하였다.

원산 시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으며 노동자들과 일경과의 충돌이 언제 벌어질 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1월 26일 원산상의는 인천에서 노동자를 모집, 수송하여 부두작업을 시작했고 인천지역에서 노동자들에게 원산행을 중지할 것을 호소하는 노상가언을 벌이던 인천노련 등 대중간부 4명이 구속되었다. 마침내 지금까지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던 안북직공조합, 양화직공조합, 우차조합, 인쇄직공조합이 동정파업에 들어갔다. 인쇄직공조합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원산상의의 기관지인 「원산데일」이 정간되었다. 심지어는 임시로 부두작업을 하던 일본인 노동자들까지도 파업대열에 동참하였으며 인천에서 조달된 노동자들 중에서 도망자, 파업참가자가 속출하기도 하였다. 전국에서 동정파업이 벌어졌으며 모금운동이 벌어졌다. 각처에서의 지지격문과 파업자금이 속속 도착하였으며 전국 각지의 노동조합이나 노동연맹으로부터 위문원과 조사원이 원산으로 모여들었다.

이와 같은 파업투쟁에 원산의 자본가들은 '함남노동회'라는 어용노조를 만들어 약 400여 명의 노동력을 확보하고 원산노련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한편 일경의 탄압도 시작되었다. 1월 27일 밤부터 원산노련이 경영하는 노동조합 간부가 실종되는 등 "원산노련측 주요인물 거처 불분명자가 속출"하였다. 마침내 1월 29일 경찰은 노련과 소비조합 장부를 압수해 가고 2월 들어 원산노련 규찰 대원들에게는 폭행과 협박의 혐의가 씌워져 속속 검거되었으며 원산노련 집행위원장 김경식 등 노조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가 시작되었다.

자본과 일제의 이러한 탄압 속에서도 원산에서는 조금도 투쟁의 열기가 사그러들지 않자 일경은 강령과 마크가 붙은하다는 이유로 합법적 행위를 공산주의 운동으로 몰아 내부의 분열을 획책하였다. 2월 말에는 3·1 특별경계를 이유로 "담총순사(擔銃巡査) 100여 명이 전시가를 행진하여 비상경계"를 하였으며 함남지사는 총독부에서 고위관리들과 밀의를 거듭하여 노련에 대한 강경한 조치가 있음을 시사하는 등 위협적인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노련간부의 잇따른 검거에 따른 타협적 지도부들의 등장은 이러한 일경의 위협에 굴종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3월 7일 강령과 마크를 개정함과 동시에 간부의 총교체를 단행하였다. "노동운동의 통일과 무산자의 세계적 제휴를 도모하며 무산계급의 해방을 기한다"는 강령은 "생활향상을 위한 노동자의 수양을 본위로"하는 노자 협조적인 것으로 수정되었으며 함남지사나 경찰부장 등에게 원만한 해결을 탄원하는 등의 비주체적인 자세로 일관하게 된다.

이러던 중 사태는 급전되어 원산상의에 속해 있던 조선인 자본가들이 원산노련의 요구사항을 인정하고 쟁의를 해결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자본 진영의 분열은 상대적으로 영세했던 조선인 운송업자가 더이상의 타업을 견디지 못하고 노련의 요구조건을 수용한 것이지만 당시 원산 운송업의 반수 이상을 조선인 운송업자가 점하고 있었던 터라 원산운송조합은 곧 분열정조가 농후하게 되었다. 노련은 이에 긴급 위원회를 소집하고 교주가 '조선인인 객주조합과 각 상회, 상점의 운반조와 결복조원 240명 전원에게 3월 25일부터 복업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이로써 그간 지도부의 타협적 자세에 불만을 가졌던 노련지도부의 탈퇴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일경의 조작 사건인 4월 1일 '함남노동회 습격' 사건으로 노련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가 진행되면서 원산노련은 4월 6일

무조건적 자유복업이라는 패배를 선언하고 만다. 지도부의 패배선언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노동자들은 상당기간 동안 취업을 거부하고 완강하게 버티었다. 4월 7일 김경식 전임위원장 등 수십여 명이 함흥지법으로 압송되는 것을 본 흥분한 파업노동자 4천 5백명이 경찰서에 밀어닥쳐 항의를 하기도 했다.

2) 원산총파업투쟁의 성과와 의의

이것으로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참가하고 전국적인 지지와 전세계 노동자계급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4개월간의 장기투쟁은 아무런 가시적인 성과도 없이 끝나고 만다. 하지만 원산총파업은 그 규모가 4개월에 걸친 완강한 투쟁으로 노동자계급의 연대투쟁의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투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원산총파업에 대한 동정 파업과 모금운동의 전국적 확산을 통해 확인한 조선 노동자계급의 연대의식과 세계 노동자계급의 지지·지원은 '노동계급의 단결'이라는 구호를 심장 깊이 새겨넣었다.

원산총파업의 패배는 계속적인 임금삭감 등 원산지역에서의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을 더욱 악화시켰지만 원산총파업투쟁의 역사는 원산지역의 모든 노동자들의 가슴속에 살아 남아 이후 원산을 중심으로 하는 30년대 적색 노조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

3 30년대 혁명적 노동조합운동

- 범태평양노동조합(太勞)운동

1) 30년대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의 전개

프로핀테른의 9월테제가 발표된 뒤 조선의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은 활동가들이 처한 처지와 시기, 성향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크게 과거 조공의 분파운동의 연장인 서울상해파의 <조선좌익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조직준비회(이하 전평준비회)> 운동과 프로핀테른의 지도를 받는 모스크바 공산대학 졸업생들의 '혁명적 노조운동' 그리고 경성지방을 중심으로 이재유 그룹 등의 새로운 국내 공산주의 운동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코민테른 파견자들의 운동과 새로운 국내 공산주의 운동은 시작부터 긴밀한 관계를 가진 채 진행되어 크게 대립되지는 않지만 과거 조공분파인 서울상해파의 운동과는 분명히 다른 운동이었다. 서상파는 20년대 후반에 결집되어 있던 자파조직을 활용하여 먼저 전국적 체계를 갖추고 서울의 경성방직공장, 용산 철도공장, 평양 및 지역에서 '혁명적 노동조합'을 건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운동은 공장 내에 깊숙히 들어가 꾸준히 활동하여 노동조합을 좌익화하고, 분파에 물들지 않은 건강한 노동자를 광범위하게 조직하는 대신 자파 기존 활동가들을 모아 성급하게 전국적 좌익노조를 결성하려는 패권주의로 10월서신에서 비판받기도 하였다. 이들과 달리 철

저히 현장조직에서부터 출발하여 프로핀테른, 범태평양노동조합회의(이하 태로)의 방침을 원론적으로 수용하는 '혁명적 노조운동'이 모스크바 공산대학 졸업생들과 이들과 만난 새로운 국내 공산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벌어진다. 그중에서도 함경남도 일대에서 일제의 4차에 걸친 탄압에도 불구하고 1930년 말부터 35년까지 진행되었던 태로계운동은 그 규모나 지속성에서 대표적인 '혁명적' 운동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2) 범태평양노동조합운동

이른바 '범태평양노동조합'사건으로 알려진 이 운동은 프로핀테른의 '9월테제'와 '10서신'에 입각한 김호반, 정달현 등 모스크바 공산대 졸업생과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프로핀테른의 지도를 받으며 수행한 '적색노조운동'이었다. 함남에서의 '혁명적노동조합운동'은 프로핀테른 5차대회에 참여한 김호반이 태로 블라디보스토크 지부에서 이이규와 조선의 혁명적 노동조합의 결성, 통일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1930년 12월 15일 함흥으로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김호반은 여기에서 생선장사를 하면서 이이규, 한병류 등을 만나 1931년 2월 15일 함흥노동연맹의 좌익화를 목적으로 하는 <함흥위원회>를 조직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김호반은 전조선적인 차원의 혁명적 노동조합 건설을 위해 서울에 이이규, 평양에 이주하, 부산 등지에 한지복을 파견하였으며 자신은 서울로 이주하여 용산철도부 노동자의 조직화를 시도하였으며 1931년 3월 상순에는 장회건을 인천에 파견하기도 한다. 한편 모스크바 공산대를 졸업하고 30년 9월 조선에 들어온 정달현은 흥남철소비료회사 내로 잠입하여 노동자 획득에 주력한다. 그는 같은해 12월 <연구회부로>를 설치하여 주병하, 김인덕, 한국태 등과 함께 1931년 1월 공장내에 <좌익노동조합 결성준비회>를 건설하기도 한다. 정달현은 평양에서 이주하와 함께 <평양노동연맹좌익화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호모공장, 전기노동자, 운수노동자를 중심으로 <평양전매국분회 조직위원회>를 결성하여 산업별 노동조합 건설을 추진하기도 한다. 함흥의 태로계의 활동은 1931년 메이데이 격문사건으로, 평양은 1933년 평양고무공장 여직공파업으로 모두 50여명의 검거자를 내고 와해되었다. 이것이 1차 태로 사건이었다. 1차 태로 사건의 검거당에서 벗어난 장회건은 다시금 조직복구에 나서 <함흥자유노동조합>과 연계하고 '화공'이라는 기관지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2차 태로운동은 1931년 2월중 모스크바 공대를 졸업하고 다시 파견되어 장회건에게 그간의 사업을 인계받았던 김원묵, 박세영 등에 의해 시작된다. 이들은 1932년 3월 '흥남좌익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흥남지역의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의 지도기관으로서 <흥남좌익>을 결성한다. <흥남좌익>은 <함흥자유노동조합>을 실질적으로 지도하였으며 '노동자신문'이라는 기관지를 발행하여 노동자 획득과 계급의식 고취를 통한 조직확대에 노력하였다. 1차 태로보다 조직력이 확대되었던 2차 태로는 함흥, 흥남 뿐 아니라 원산지역에서 독서회를 조직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산업별 노동조합준비회>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원산노동자'라는 출판물을 발행하여 조직확대에 힘쓰는 한편 원산지역, 학생독서회 등의 조직에도 힘을 쓰기도 한다. 이렇듯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던 2차

태로는 염열계의 노동운동조직과의 통합을 모색하여 공동으로 준비하던 32년 메이데이 투쟁에서 일경의 예비검속에 의해 500여명의 검거자를 내고 와해해 버리게 된다. 이때 2차 태로의 지도자 김원묵은 일경의 야수적 고문에 살해되기도 하였다.

이로써 함흥, 홍남, 원산지역의 노동운동은 심각한 타격을 받지만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은 32년말 조선에 파견된 한동혁을 통해 다시 재건된다. 한동혁은 1, 2차 태로사건의 검거망을 피해 잔존해있던 동지들을 규합하고 프로핀테른에서 파견된 임민호, 고경인과 함께 3차 태로를 조직한다. 이들은 함흥, 홍남지역의 노동정세를 조사하고 화학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태로운동을 벌일 것을 합의한다. 이들은 함흥질소비료공장에서 '혁명적 노동조합'을 재건하고 홍원 통조림 공장의 여직공운동을 지도하고 조직확대를 위해 『뉴스』와 『노동자신문』을 발간한다. 결국 3차 태로는 임민호의 8명이 1933년 2월 검거됨으로써 막을 내린다.

이후에도 1932년 국내에 들어와 활동중이던 이경덕을 중심으로 홍남질소비료공장 장진수력발전소 공사장에서 조직활동을 계속하다 20여명의 검거자를 내고 4차 태로운동을 마감한다.

4차에 걸친 태로운동은 이후에도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계속된다. 2차 태로 사건으로 검거되었던 태로조직원들은 감옥에서 동지를 규합하여 이후 이들이 1933년 9월부터 원산노동연합회, 함남노동회 등의 산별노조로의 재현성 활동을 지속했으며 36년 1차 태로로 구속되었던 이주하는 출소이후 이강국, 최용달들과 함께 <적색노동조합 원산좌익 위원회(이하 원산좌익)>을 건설하여 함남지역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을 지속하게 된다.

3) 태평양노동조합운동의 의의

이렇듯 함경도 지역의 모스크바 공산당 출신의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은 30년대를 거쳐 지속된다. 네차례에 걸친 일경의 야수와 같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이들은 공장내 '혁명적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동지들을 규합하는 운동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나갔다. 물론 태로 운동은 35년으로 그치지 않았다. 태로 운동은 조선내 당재건의 위한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은 직접적인 '원산좌익'의 산파였을뿐 아니라 30년대 조선 전역의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에 영향을 미쳤고 대공장 내에서 발굴되고 단련된 혁명적 노동자계급이 30년대 중반 당재건운동의 주체로 설 수 있게 된 것이다.

4 이재유,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정수

- 30년대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정수

"이재유 동무는 우리들과 함께 8월 15일 해방의 날을 맞이하지 못하고 원통하게 작년 청주 보호교도소에서 옥사하였다...그는 정이 있고 눈물이 있고 굳센 실천력과 많은 감화력을 가진 지도자였다. 그가 한번 움직이면 수많은 청년

이 그와 생사를 같이할 것을 맹세하였고 그의 신변의 위험하게 되며 죽음으로써 그를 지킨 청년이 많음을 생각할 때 그가 혁명적인 지도자로서 청년들에게 얼마나 신앙이 두터웠던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실로 조선에서 1933-37년 혁명운동의 고조기에 당재건운동의 확고한 기초를 수립하는 동시에 많은 청년간부를 훈련시켰으니 그 공적이 과연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신천지』 46년 4월호 및 5월호에 실린 '조선민족해방 영웅적 투사 이재유 탈출기'라는 위 글에서 우리는 해방을 맞이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일제하 선배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애뜻한 '동지애'를 확인하거나 한편으로 30년대 경성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재유 그룹 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접할 수 있게 된다. 이재유 개인의 탁월한 보위능력뿐 아니라 '트로이카 운동'이라는 창의적 당재건운동을 고안하고 경성지역 당재건운동의 통일을 위해 헌신했던 이재유그룹의 운동은 실로 30년대 공산주의운동의 정수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 기반을 두고 '자주적 공산주의 운동'을 벌여왔던 이재유 그룹의 운동은 단순히 권위주의적이었던 국제노선의 운동과 대립, 경쟁하면서 30년대 '혁명적노동조합운동'을 이끌었으며 조선내 당재건운동의 통일체인 '경성그룹'결성의 사실상 원동력이 된다.

1) 창의적 당재건운동 - '트로이카' 운동

4차 조공사건으로 28년 서대문 형무소로 압송되었던 이재유는 옥중에서 조선공산주의 운동의 노동자 대중과의 굳건한 결합과 인텔리운동으로서의 파벌적 경향의 일소를 위한 새로운 '당재건운동방식'에 대한 자기노선을 이미 정초하였다. 출옥과 함께 그는 그동안의 공산주의 운동의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12월 태계' 이후 조선공산주의 운동의 고질병인 파벌이 점차로 극복되고 있으며 노동대중들의 혁명성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그는 상부조직만을 먼저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 운동은 어디까지나 공장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대중의 운동이어야 한다는 것, 동지는 절대로 투쟁을 통해서만 획득해야 한다는 것 등의 방침을 세우게 되었다. 이러한 방침 아래 이재유는 '트로이카 운동'을 제시한다.

"과거의 운동경험과 같이 쓸데없이 조직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우선 노동대중의 불평불만이 있는 곳에서 공산사상의 선전선동을 하여 대중을 획득하고 상당한 그룹이 결성된 때에 비로소 조직을 가져야 할 것이다...종래와 같이 사람을 지도한다거나 지도를 받는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함과 동시에 자신도 지도되는 것에서 공산주의자로서의 제 1보를 내딛어 스스로 최하층의 노동자들과 교류하면서 대중중에서 동지를 획득하여 서서히 상부조직으로 전개하려고 한 것이 나의 근본방침이었다."

위와 같은 조직방침은 아직 의식 수준이 낮은 노동자 대중들의 의식을 고양시켜내는 한편 파벌적 잔재를 청산하고 있지 못한 각 운동자들과 우선 공동투쟁 등을 통하여 트로이카라는 조직으로 묶어낸 다음 코민테른 등 국제선의 승인을 얻어 정식조직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었던 것이다.

2) 이재유품의 활동

33년 이재유는 이러한 당계건 노선을 기반으로 동지들을 규합하기 시작한다. 33년 9월 중순 안병준, 변홍대(김형선그룹), 이현상, 최소복 등과 함께 트로이카 운동을 결의하고 안병준, 변홍대, 이현상은 노동운동, 최소복은 학생운동, 이재유는 전체의 총괄을 분담하고 각자 적색노조와 반제동맹을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이재유는 트로이카 성원과 함께 '중앙상공회사', '동명고무회사', '종연방직회사 경성제사공장' 등의 파업투쟁을 지도했으며 '공장내 활동방침', '공장조사표' 등의 팸플릿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33년 12월 말에는 정태식을 통해 경성제대 미야게 교수와 공동활동을 시도한다. 좌익교수의 획득과 그를 통한 국제선의 확보라는 점에서 이재유 그룹은 이들과 적극적인 연계를 피하게 되며 국제정세분석, 조선정세의 분석, 과거운동의 비판, 당면 임무 및 장래의 운동방침 등 4개의 항목에 대한 공동의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당계건운동의 통일을 위한 노력은 1934년 1월 이재유의 체포로 인해 잠시 중단되고 만다. 끝이어 이재유는 서대문 경찰서에서 탈출에 성공, 미야게 교수의 관사에 잠입하였다.

미야게 교수의 검거 후 34년 5월 21일 미야게의 관사를 무사히 빠져나온 이재유는 용두산동에 머무르면서 도로공사 인부로 신분을 위장하고 조직복구작업을 시작하였다. 이시기 이재유는 이관술, 박영출과 만나 1934년 12월 상순 <경성제건그룹>을 결성하고 36년 3월경부터는 "조선공산당 재건의 전제로 서울에서 좌익전선을 통일 '하기로 하고 그 실천수단으로서 '8월 1일 반진태이 및 간도 공산당 피고 사형집행 반대'라는 공동 투쟁과제를 내세우고 서울지역 '좌익전선'통일을 위한 주도적 실천을 벌인다.

하지만 거듭되는 조직원의 검거와 '좌익전선'의 좌절로 인한 조직원의 이탈로 이재유품의 활동은 축소되어 갔다. 이러한 사정들로 인해 투쟁을 통한 동지의 획득이라는 초기의 활동방침이 기관지 팸플릿을 통한 혁명의식 고양 정도의 활동으로 축소되었으며, 마침내 36년 12월 25일 이재유는 검거되고 만다.

3) 이재유의 검거와 자주적 공산주의 운동의 좌절

이재유가 검거된 후 일경들은 축책을 들며 축하연을 벌였으며 당시 일제의 어용지 『경성일보』는 호위를 발행하여 '집요흉악의 조선공산당 마침내 괴멸하다'는 표제 아래 '20여년에 걸친 조선공산당 운동사는 이제 최후의 일혈이 완전히 봉쇄되고... 괴멸종식되었다.'라는 보도를 실기도 했다.

경기도 경찰부에 체포되어 일경의 아만적인 고문에 시달리던 이재유는 결국 지병으로 해방을 10개월 앞두고 옥사하고 만다. 이로써 창외적 당계건운동과 좌익전선의 통일을 위해 힘써 왔던 4년여의 이재유품의 운동은 막을 내리게 된다. 이후 이재유의 불굴의 혁명정신과 투쟁의 의지는 경성공그룹, 재건공산당으로 인적으로 전수되었지만 이재유품의 창외적 공산주의 운동은 국제파 공산주의 운동의 주도 아래 그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고 만다.

제 5 부

김일성과 항일무장투쟁, 그리고 북한의 역사인식

1 재만조선인의 위치

1) 재만조선인의 분포

조선인의 만주이주가 본격화된 것은 청조의 대금정책이 이완되기 시작한 19세기 말부터이다. 이주 조선인은 주로 두만강 대안인 간도 지역(북간도, 동만)과 압록강 대안인 서간도지역(남만)에 집거하였다. 1930년대 당시 대략 80만 가량으로 추정되는 재만조선인 가운데 60% 이상이 북간도에 그리고 약 25% 가량이 서간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간도지역은 조선인의 절대수 뿐 아니라 중국인과의 비율에서도 특수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간도 주민 중 약 75% 이상이 조선인이었기 때문이다. 화통현의 경우는 무려 약 95%가 조선인이었다. 30년대 무장운동을 간도지역 중심으로 살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즉 간도에서의 조선인 운동이 단순히 중국공산당 활동의 일부분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있었던 데는 이러한 인구 구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 중국의 대조선인 정책

만주에서 조선인의 위치는 일제의 만주 침략과정과 깊은 상관관계를 맺으면서 변동되어갔다. 1909년 일제는 청조와 이른바 간도협약을 체결하는데, 이 조약에서 규정된 한인의 위치는 “간도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청국의 법률에 복속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일제가 청국으로부터 경제적인 이권을 얻어내는 대신 간도의 영유권과 간도조선인에 대한 권한을 청국에 넘긴 것이었다.

조선인문제의 본격적인 대두는 1915년에 중일 사이에 이른바 남만 및 내몽고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다음부터이다. 이 협약의 가장 큰 특징은 조선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대신 “일인은 이 지역에서 토지상 조권(토지임차권), 치외법권, 영사재판권 등을 지닌다”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일제는 한일병합으로 조선인은 이제의 신민이 되었으므로 조선인도 당연히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일제는 조선인 보호를 구실로 만주 진출을 본격화하게 된다. 반면 중국은 이 조약은 일본인에게만 해당하고 조선인은 기존의 간도협약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주의 조선인(엄밀히 말하자면 간도의 조선인)이 간도협약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남만조약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중일 사이의 현안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즉 1915년 이후 중일은 조선인 귀속문제로 대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측에서 세운 대책이 이른바 조선인 귀화정책이었다. 즉 조선인을 중국인화하여 일제의 빌미를 원천봉쇄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족적 편견이 개재되어 있는 귀화정책은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외면하게 된다. 조선인들은 당시에 이미 조선인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조선인 자치를 제기하였으나 중국은 자치 절대 불가의 입장을 고수하고 간도 조선인의 자치는 이후 줄곧 일제의 조선인 회유 슬로건으로 이용되었다.

1925년에 이르러 조선인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조약이 중일 사이에 체결되는데 이른바 미쓰야 협정이 다. 이 협정의 원 명칭은 불령한인(不逞韓人) 취제에 관한 협약이다. 일제는 문자 그대로 독립군을 토벌하는 데 중국관헌과의 협조를 통해 그 효율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이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중국 관헌은 이 협정을 일반 조선인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적용하여 대대적인 조선인 압박 및 구축정책을 펴게 된다. 중국에서는 조선인 독립군을 토벌하는 차원이 아니라 조선인을 만주에서 몰아내기 위한 방편으로 미쓰야협정을 이용하였다. 20년대 후반에 이르러 중국군벌정권은 조선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원시적인 방축정책을 취한 것이다. 1931년에 일제가 만주를 침략하기 직전의 상황은 이러하였다.

만주사변 직전의 재만조선인은 조선인과 일제를 동일시하는, 왜곡된 민족정착을 구사하는 중국과, 조선인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일제 사이에서 대단히 불안한 처지에 있었다. 30년대 조선인 운동가들에게는 중국인과의 올바른 협조와 이를 통해 조선인의 이해와 요구(조선의 독립, 조선인 자치)를 관철시켜야 하는 임무가 부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는 당연히 조선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간도의 조선인들이 이루어내야 할 과제였다.

2 항일부대의 변천과정과 상반된 평가

1) 항일부대 편제의 변천과정

중국공산당은 남만 반석현을 중심으로 한 유격대를 제32홍군으로 명명하고 이를 확대 발전시켜 동북항일연군 제1군으로 확장한 이래 총 11군까지 편성하게 된다. 간도지역에서는 1931년에 중공 동만특위 서기 董長榮이 주재한 것으로 알려진 “동만주 각현 당, 당원 적극분자 회의”(명월구회의)에서 항일유격대와 유격근거지를 만들 것이 결정되었다. 이후 간도 각지에서 유격대가 성립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마침내 1934년 3월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제1독립사가 건립된다.

제2군 제1독립사 간부 명단

사장 : 주진 경위 : 왕덕태

1단 (단장 : 김순덕 경위 : 최학철)

2단 (단장 : 맹소상 경위 : 김낙천)

3단 (단장 : 방진성 경위 : 김일성)

4단 (단장 : 하덕운 경위 : 김현)

밀줄 친 사람은 조선인

1935년 5월에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으로 정식 선포

제2군 간부명단

군장 : 왕덕태 정위 : 위중민 정치부 주임 : 이학중

1단 (단장 : 안봉학 정위 : 주수동)

2단 (단장 : 장천학 정위 : 조아범)

3단 (단장 : 방진성 정위 : 김일성)

4단 (단장 : 후국충 정위 : 왕운성)

1936년 미혼진회의를 통해 항일연군 제2군으로 개편

항일연군 제2군 간부명단

군장 : 왕덕태 정위 : 위중민 정치부주임 : 이학중

1사 (사장 : 안봉학 정위 : 주수동)

2사 (사장 : 진한장 정위 : 왕운성)

3사 (사장 : 김일성 정위 : 조아범)

1936년 7월에 1군과 2군을 통합(항일연군 1로군)하여 6개사로 편성, 곧 6개사를 3개의 방면군으로 편성

항일연군 제1로군 간부명단

군장 : 양정우 정위 : 위중민

1방면군 (군장 : 조아범 정위 : 이준산)

2방면군 (군장 : 김일성 정위 : 여택기)

3방면군 (군장 : 진한장 정위 : 박득범)

간도 이외의 지역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 조선인 지휘관은 남만지역 제1군의 이동광, 이흥광, 북만지역 3군의 허형식, 김책, 7군의 최석천(최용진) 등을 꼽을 수 있다. 물론 이들의 활약은 대단히 주목되는 것이긴 하지만 간도지역의 그것과 비교할 때 조선인의 운동으로서의 의미가 약하다는 점은 분명할 듯 하다.

2) 김일성부대(간도의 조선인부대)에 대한 상반된 평가

만주의 무장투쟁, 엄밀히 말해서 간도지역의 김일성부대에 대한 북한에서의 공식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다.

1926년 김일성이 새세대 공산주의자 중심으로 타도제국주의동맹 건설

— 현대사의 시점

1930년 카를라에서 <조선혁명의 진로> 발표

— 조선혁명의 방향 및 당면과제 제시

1932년 안도현에서 인민유격대 창설

— 건립일인 4월 25일은 조선인민군 창설기념일

1934년 조선인민혁명군 건립

북한의 견해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김일성부대를 초기부터 조선의 독립을 위한 독자적인 부대로 서술하고 있는 점이다. 결국 “김일성 가짜론”은 논외로 한다면 30년대 항일무투에 대한 기본적인 대답점은 다음의 두 주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대(항일연군 - 필자주)는 분명히 공산군이었고 한인부대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김일성은 한인이 아닌 중국인의 지휘를 받고 만주에서 일본군과 싸운 것이다” (서대순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동만의 항일 유격대는 형식적으로는 중공당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조선혁명의 무장부대로서 지위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조중민족간 국제통일전선의 일환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므로 재만조선인의 무장투쟁을 중공당산하 중국혁명의 한 부분으로만 파악하려는 견해는 잘못이다” (이재화 『한국근현대민족해방운동사』)

이러한 대립된 견해는 30년대 무장운동의 의미를 거론하는 것으로 대단히 중요한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된다. 즉 30년대 무장운동을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의 일부로 위치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대립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30년대 무장운동은 중국공산당의 총괄적인 지휘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미 1928년 코민테른의 1국1당 원칙에 의하여 만주의 조선인들은 중국공산당에 1931년까지는 모두 입당을 한 상태이다. 형식적으로 보자면 30년대 만주의 무장운동은 중국공산당의 지도 아래 이루어진 중국공산당원의 운동이 된다. 그러나 만주의 무장운동은 중국공산당의 일부로서만 기능했다는 주장의 진위를 파악하는 데 이같은 형식적인 지휘체계만을 따져서는 곤란하다. 과연 조선인 무장세력이 조선인으로서의 요구, 즉 조선의 독립군으로서의 역할과 재만조선인의 자치권 획득의 역할을 수행했는가 못했는가 평가의 핵심이 되어야 하겠다. 우리는 이러한 과제를 이루는 과정에서 치루어야만 했던 조선인의 희생과 얻어낸 성과를 민생단 사건과 조국광복회의 건설을 통해 생생히 보게 된다.

3 간도의 특수성과 무장운동의 역사적 의미

1) 민생단 사건

민생단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민생단은 1932년 당시 매일신보 사장이던 박석윤이 “간도주민의 생활산업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용정에 설립한 친일단체였다. 주된 활동은 일반주민 회유 및 항일부대에 대한 스파이공작이었다. 민생단은 5개월만에 해산되었으나 이후 상당기간 항일부대에 큰 타격을 주었다. 그 주된 피해자는 조선인이었다. 조선인 대원은 거의 모두 민생단원 의심을 받을 정도였고, 실제 500여명의 조선인 대원이 민생단원으로 몰려 살해되었다. (김일성조차도 민생단원의 의심을 받았다) 그러나 민생단 사건은 단순히 “혁명군 내의 밀정에 대한 과도한 대응”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사건은 중국인의 조선인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 그리고 그들의 편협한 민족정책에서 비롯된, 조선인 간도이주의 시작 이래 쌓여온 조선인 문제의 집약적 표출이었다. 실제로 중국인 간부들은 민생단 문제를 중국인 대 조선인의 문제로 파악하고 다수를 차지하던 조선인 간부를 교제하는 기회로 활용하려 하였다 - “과거에 縣署에 한사람의 한족동지도 없었다”(동장영) - 우리는 민생단 사건을 통해 조선인이 압도적인 간도에서 조선인의 요구가 강했다는 사실, 이것을 정당하게 수용하지 못한 중공의 모습, 그리고 편협적인 민족적 갈등을 확인할 수 있다.

2) 민생단 문제의 해결과 조국광복회의 건설

민생단문제의 해결은 사건 자체의 끝맺음이 아니라 조선인에 대한 올바른 정책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변화는 코민테른으로 대표되는 세계공산주의의 운동의 노선변화와 중공당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었다. 1935년 코민테른 7차대회에서는 광범한 반제통일전선이 의결되었고 아울러 소수민족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표명되었다. 또한 중국공산당에서는 이른바 8.1선언을 발표하여 만주에서 광범한 항일연군을 결성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만주문제에 대한 토의의 결과를 코민테른 기관지에 기고한 양송의 논문은 조선인 정책의 변모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 현재의 인민혁명군 2군과 다른 항일유격부대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우게 한다는 과제로 향해야 할 것이다... 조선인의 항일민족혁명당의 건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당의 주요한 임무는 조선의 민족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일제에 투쟁하는 것이다.”

이는 획기적인 변화였다. 과거 추상적 중조연합만을 강조하던 차원으로부터 조선인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모한 것이다. 이러한 방침을 접소한 위중민은 만주로 귀환하여 36년 3월 미혼진회의를 통해 신방침을 전달하고, 인민혁명군을 항일연군으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제6사를 조광건설을 위해 국내진입이 유리하고 지

형적 이점을 지니고 있는 장백현 지역으로 이동시키게 된다. 마침내 6월 10일(북에서는 5월 5일이라고 함) 조광 건설이 선포된다. 조광의 건설은 재만조선인(간도조선인)의 두 가지 과제, 즉 조선의 독립과 재만조선인 자치라는 요구가 명확히 반영된 결과물이었다.

재만한인조국광복회 10대 강령 중

1. 조선민족은 단체와 개인을 구별하지 않고 국내외를 논하지 않고 일제히 단결하여 강도 일노와의 강력한 투쟁으로써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완성한다.

2. 왜놈의 식민지 통치하에 있는 기만적 자치를 굳게 반대하고 중한민족의 긴밀한 연합으로써 공동의 적인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여 재만한인의 진정한 자치를 실행한다.

1930년을 전후하여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이 중공당에 입당하면서 “조선인 공산주의자는 조선의 혁명에서 손을 떼라”는 주장을 하던 상황, 그리고 조선인자치의 주장은 곧 일제의 앞잡이로 물리던 상황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시작한 조선인 무장대원들은 자신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중공당의 적절한 변화 속에서 너무도 당연한 조선의 독립과 조선인자치를 전면에 내걸고 무장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여기서 조광의 책임자가 누구였는가에 대한 이견을 잠시 살펴보자.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김동명이라는 가명으로 10대강령을 기초하였으며 조광의 책임자였다고 한다. 반면 일부 학자들은 발기인 명단의 3명(전광, 이상준, 엄수명) 중 김일성이 빠져 있으므로 김일성이 주도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하면서 주로 전광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역반박으로 책임자와 발기인이 반드시 동일인일 필요는 없다며 김일성 주도설을 옹호하기도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광이 왜 탄생했는가를 살피는 것이 먼저 요구된다. 조광은 이미 지적한 대로 만주의 항일연군 중에서 조선인 부대로 하여금 조선독립의 임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제는 간도의 조선인들에게 부여된 임무였다. 위의 3인 중 전광과 이상준(이동광)은 남만의 1군에서 활동하던 인물이 확실하고 엄수명 역시 남만의 운동가인 엄필순으로 추정하는 의견이 있는 바, 이들은 모두 남만지역의 활동가들이었다. 조광은 간도의 특수한 상황으로부터 비롯된 단체이다. 따라서 앞의 세명이 조광을 주도했다고 보는 것은 조광의 전사에 대한 이해 없이 단지 문서에 급급한 해석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30년대 재만 조선인 무장운동은 중국공산당의 항일 투쟁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나 조선인의 운동으로서 기능하려는 조선인의 노력과 엄청난 희생이 스며들어 있는 운동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운동을 단지 중국공산당의 일부로 대단치 않은 무장세력으로 치부하거나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신비화 작업은 모두 비판되어야 한다. 30년대의 만주의 무장운동은 조선의 독립운동으로 발전시키려는 조선인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그

결실이라는 측면, 그리고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전사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올바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체주의의 자치대학 건설을 향한 제2 대학

제 6 부

해방이후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역사

공동체주의의 자치대학 건설을 향한 제2 대학

이 시기는 남북한의 지배자들에 의하여 조선 공산당 운동의 혁명성이 거세된 시기이다. 조선의 공산주의 자들은 해방이후공간에서 벌어진 민중투쟁의 성공적인 지도에 실패함으로써 역사의 주인공에서 멀어져간다. 혁명성을 거세당한 남북한의 운동은 범죄적 한국전쟁을 통하여 남한 자본가 정권과 북한의 기괴한 사회주의 정권을 만들어 내고 이후 남한의 공산주의운동에 있어서도 기괴한 운동이 대중을 주도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 낸다. 이른바 김일성주의 운동, 주체사상과운동이 그것이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를 가지지 못한 주체사상과운동은 이제 개량 시기를 지나고 있다.

1 해방에 이은 조선 공산당의 재건과 투쟁

1) 조선공산당의 재건과 혁명적 대중 단체의 설립

세계 제2차 세계 대전이 미, 소를 비롯한 연합국 측의 승리로 끝나면서 36년간의 일본 식민지 통치는 막을 내렸고 조선은 해방을 맞이하였다. 해방후 조선공산주의 운동은 일제의 식민지하에서 불굴의 투쟁으로 역사적 정통성을 지켰던 세력들을 규합하여 조선공산당을 설립하였다. 새로운 조선공산당의 설립은 1929년 조선공산당의 와해이후 국내외에서 걸쳐 혁명적인 농, 노조운동과 굳건히 결합하였던 당재건운동과 특히 당재건운동을 최고의 형태로 발전시킨 이재유 그룹의 운동의 전통을 이어받아 건설되었다. 해방이후 조선공산당의 건설을 주도했던 그리고 즉각적인 당의 건설로서 자신들 운동의 정당성을 대중적으로 입증받은 것은 박헌영의 경성그룹이었다. 박헌영과 이재유의 동지들이었던 김상봉, 이현상, 이관술등은 경성그룹을 만들고 당재건운동을 벌여나갔고 이들의 투쟁은 해방이후 화요파, 열열파, 서울파 등이 제휴하여 만들었던 장안파공산당의 해산과는 대조적으로 조선공산당의 재건에 성공하였다. 재건과 함께 조선공산당은 전국사업에도 관여하는 동시에 혁명적 대중단체의 건설에 박차를 가해서 조선공산당청년동맹,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전국농민조합총연맹, 전국부녀총동맹, 전국청년단체총연맹, 조선민주주의 민족전선 등의 각종 단체를 성공적으로 조직하였다.

조선공산당은 건설초기에서 1946년 이전에 이르는 기간에 당면한 투쟁의 목표를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에 두고 토지개혁과 완전한 민족의 독립, 즉 통일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조선공산당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강구하고자 하였으며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을 진보적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하여 미군정과의 평화적인 관계와 비판의 탄력적인 전술을 취한다. 이는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협정안을 채택한 미국의 입장에는 지지하고 남조선내 좌익세력들에 대한 제재와 제약에 관해서는 미군정을 비판하는 정책을 날게 했다.

2) 조선공산당의 미군정과의 투쟁

미군정은 1차 미소공위가 결렬되고 난 뒤 미군정은 초기의 남조선내 좌익에 대한 우회정책을 철회하고 전면

적인 탄압에 나서게 된다. 이는 세계적인 규모에서의 소련과의 냉전의 심화와 중국공산혁명의 성공적인 수행 등으로 인한 동남아시아에서의 자본주의 질서에 대한 수호의 의미를 띠고 단순히 미국에 우호적인 정부의 수립이 아닌 우익세력이 주도권을 잡는 반공자본주의 국가의 수립을 목표로 한 정책이었다. 1946년 5월 4일에 조선공산당에 대한 탄압과 와해를 목적으로 조선공산당 위조지폐사건을 날조한 것을 시작으로 미군정은 5.16 정관사발당을 습격하여 폐쇄시키고 해방일보를 무기정간처분하였다. 이 사건으로 조선공산당의 기관술이 검거되고 이후 대전 형무소복역 중 학살된다. 5월 18일에는 조선공산당 본부에 대한 수색도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미군정의 강력한 좌익 척결정책에 맞서 조공은 이른바 신전술로의 전환(46. 7)으로 미군정의 탄압에 대응한다. 미군정의 탄압이 생산현장에까지 들어오자 철도노동자가 선두로 들고 일어나게 되고 산업분야의 노동자들이 이에 결합 9월 총파업의 시초가 된다. 미군정은 조선공산당 간부들에 대한 수배령을 내려 다수의 당원을 검거했다. 이에 조공은 전국노동조합 평의회를 통해 전국총파업의 계획을 수립한다. 9월의 총파업은 전평산하의 조직노동자 25만명과 비조합원 5만명이 가세하여 전국에서 30만 규모의 대중파업을 이끌어냈고 참가계층이 은행, 병원, 회사로 확대됨에 따라 미군정을 수세로 몰아갔다. 그러나 파업이 유리하게 타결되어나갈 무렵 10월 2일 대구에서 총파업 참가자에 대한 탄압과 우익의 백색테러에 저항하는 시위중 경관대의 발포로 인하여 대중이 격분, 경찰서의 무기를 탈취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구실로 미군정은 인민을 사살하고 좌익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체포, 폭행, 살해를 멋대로 자행하였다. 10월 인민항쟁으로 수많은 공산당원들이 검거, 투옥되고 중형을 받거나 사형 당하였다. 인민항쟁의 후파로 더이상 남조선에서의 활동이 불가능해진 박헌영은 월북, 이후 남로당 중앙과의 연락을 통해 운동을 지도한다.

3) 조선공산당의 오류

조선공산당이 해방후 남조선에서 수많은 공산주의자와 민중들의 피를 흘리는 혁명적인 투쟁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운동을 성공적으로 끌어내지 못했던 이유중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은 해방이후 국제정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조공은 1930년대까지 조선의 공산주의 운동을 지도했던 코민테른의 영향력을 일국사회주의 노선 속에서 스탈린 지도하의 소련의 대외정책과 동일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공산당은 당시 소련의 대외정책이 제 3세계 피억압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보다 자국에서 완성되어버린 일국사회주의를 수호하려는 측면이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간파하지 못했다. 따라서 소련의 노선에 대한 추종은 모스크바협정을 지지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찬탁을 지지함으로써 그것이 미국측이 먼저 제시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우익민족주의자들이 정치적으로 결집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말았다. 해방 이후 조선의 사회주의 세력들의 규모에 대하여 무난히 인민정부가 세워질 것으로 믿었던 소련의 생각은 반탁세력의 등장과 냉전심화에 따른 남쪽지역에 대한 미군정의 초강경정책에 부딪혀 혼란에 빠졌다. 따라서 이후에는 남조선의 혁명세력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

북조선을 소련 사회주의 수호의 기지로 놓고 우선적으로 건설하는 정책을 취하게 된다. 미국 또한 반탁투쟁을 통한 남조선 우익세력의 효과적인 결집에 성공한 후로 46년 미소공동위가 결렬되자 45년 처음 등장한 령단구상에 따른 남한내 단정수립을 통한 반공기지의 구축노선을 추진해나가기 시작한다. 조선공산당은 미소의 대립 뒤에 놓여진 세계자본주의 수호와 일국사회주의 수호의 대결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조선상황에 실제로 들어맞는 전술을 채택하는 데에 실패하였다. 또한 재건공산당은 창건과정에서 20년대 운동의 후파로 남아있던 분파운동의 완전한 청산이라는 과제 역시 당의 투쟁의 과정에서 달성하지 못하고 대동단결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2 북조선노동당과 남조선노동당의 건설

1) 북조선공산당의 설립

북조선은 남조선과는 달리 소련의 적극적인 지지아래에서 김일성을 비롯한 좌익세력이 빠른 시일안에 주도권을 장악한다. 1945년 10월 서북 5도당대회에서 북조선 분국의 설치가 이루어지고 그해 12월 김일성은 일국일당 원칙에 의거하여 북조선공산당 설립에 반대하는 세력과 김일성의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지방주의자, 종파분자로 몰아세우면서 북조선공산당을 설립하고 조공과의 통일적인 변혁노선을 추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포기하게 된다. 또한 북한에의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익세력의 고립, 무력화를 미완적으로 수행하여 우익세력들이 대거 월남하도록 방치함으로써 남조선 지역내 우익의 세력을 급증시키고 남조선의 조선공산당에 대한 탄압과 민중들에 대한 학살을 외면한 채 신사회 건설에 몰입, 계급투쟁의 부담을 남조선으로 전가시킨 결과를 낳았다.

2) 남로당의 건설과 계속되는 민중투쟁

북조선 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을 통합하여 북조선 노동당이 된 것에 이어서 박헌영의 월북후 1946년 11월 23일 조선공산당 지도부는 조선공산당과 인민당, 신민당이 합당하여 남조선 노동당의 결성을 이룬다. 46년 남로당의 결성이후 역시 계속되는 미군정의 좌익 세력에 대한 탄압에 맞서 남조선의 좌익세력들은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해 나간다. 1947년 2월 구국투쟁과 1948년부터 시작된 제주도 항쟁 1948년의 여수 순천 항쟁이 그것이다. 남로당은 47년 2차 미소공위의 결렬과 더불어 가속화된 미군정의 대규모 탄압정책과 48년 8월 15일 단정수립 방침이 이승만과 미군정에 의해서 가시화되자 이에 맞서 무장투쟁 노선을 확립해 나갔는데 남로당의 결성으로 조선공산당이 노출된 상태에서 최소한 군사적 지식도 없이 진행된 무장투쟁 노선으로 인하여 당에 대한 보위력은 급속도로 하락하였다. 이시기 당은 비합법 정세 속에서 비합법전위당의 보위 강화와 외곽의 대중조직에

대한 지도를 통해서 투쟁을 해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과는 동떨어진 노선을 걷게 됨으로써 조선의 공산주의자는 남녘에서 일어난 외로운 싸움의 와중에서 이름도 없이 산화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남조선 노동당의 투쟁은 남조선의 단독정부 수립을 막는 데에 실패하였다.

3) 남로당과 북로당의 통합

1948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부터 이미 공화국 정부의 중앙기구에 남로당 지도부(박헌영, 이승엽, 허성택, 박문규 등)가 취임함으로써 북로당과 남로당의 통합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1949년 6월 30일-7월 2일 평양에서는 합동대회가 추진되어 조선노동당을 결성했다. 조선노동당 강령은 북로당의 강령을 토대로 한 것이었고 남한운동에 대한 모든 지시는 평양의 지도부가 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1949년 9월 남조선에서 투쟁 중이던 당중앙간부들이 모두 검거됨으로써 남조선의 공산주의 운동세력들은 절멸하였다. 김일성은 조선인민공화국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일과 북한 권력의 전국적 확산만을 목표로 삼았을 뿐 남한내에서의 운동의 주체적·형성과 연대투쟁에는 힘을 쏟지 않았다. 남한에서 공산주의 운동은 단절되었다.

3 한국전쟁의 발발과 공산주의 운동의 단절

한반도 남단의 공산주의 운동세력들이 궤멸하고 남한에는 이승만 정권이 들어섰다. 이승만은 단정수립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과 불만을 북진통일이라는 극우적 방침으로 제압하려 하였고 북의 인민공화국은 민주기지 노선을 통해 양측이 무력을 통해 통일을 달성하려는 준비를 해나갔다. 소련의 지원을 받는 북한의 전쟁준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패한 친일파들로 이루어져있는 이승만정권은 자신의 말을 책임질만한 실질적인 준비를 하지 못했고 북한의 전쟁준비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결국 북한의 인민정권은 조국해방전쟁의 과감하게 실천하다. 3년에 걸친 전쟁의 와중에 남북한의 민족은 양측에 의해 저질러진 학살에 죽어갔고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은 완전히 씨가 말랐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냉전지대로 민족비극의 상징으로 쑥대밭이 되었다. 이 전쟁은 그들의 말대로 조국해방전쟁이어야 하는 것이었으나 양측 민중의 대량 희생과 인식적인 단절, 그리고 해방세력의 절멸을 낳고 어느쪽도 다른 한쪽을 해방시키지 못한 채 끝나고 만다. 이 전쟁의 실패는 북한 지역에서 조선공산당운동의 핵심세력에 대한 절멸을 낳았다. 오기섭, 정달현, 최용달, 박헌영, 이강국, 임화 등의 조선공산당 세력들은 전쟁의 와중에 그리고 전쟁이후의 책임을 물어 미제의 간첩이라는 죄목아래에서 김일성 일파에게 숙청당하였다. 조선공산당의 불굴의 투사들을 동지의 가면을 쓰고 검열과 숙청으로 제거함으로써 태어난 정권, 그들의 피를 딛고서 역사에 대한 날조와 왜곡으로 일어난 정권이 김일성주의자들이 사랑하는 또 하나의 조국, 북한 실체이다.

SEXUALITY

기획의도

강간은 단순한

여성의 몸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여성성의 착취와 사회적 통제를 의미한다.

이제

여성이라는 GENDER에 관련된

불평등의 제거와 함께 여성성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강간의 추방'과 '남성중심 사회에서의 여성의 시각 바로세우기'라는

성문화 개혁을 시도한다.

제 1 부

강간을 이야기 한다.

1 강간을 학문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매우 낯설게 느껴진다.

실제로 강간에 대한 체계를 세우려는 노력은 1970년대 초에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강간의 특성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범죄라는 것이다. 계층별 이해와 관련이 된 다른 문제들과 비교할 때 강간은 여성 전체를 하나로 묶어 줄 수 있는 실천적인 운동의 이슈로의 자리 매김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 80년대 이전의 법전에서 도출된 강간의 개념을 살펴보자.

강간이란 '자연에 어긋난 성관계로서 여성의 의지에 반하여 남성에 의해 여성에게 강제되어졌고, 힘이 달는대로 여성의 저항을 동반하는 것이다.' 다른 정의로는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질속에 삽입되는 행위, 또는 '풍기문란'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타인에의 불쾌감을 조성하는 짓궂은 장난일 뿐이다. 처벌의 개념도 모호하다.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남성의 소유물로서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처벌이 가해졌고, 그 내용도 가정 파괴나 정조 유린등의 명목으로 가해진 것이다. 개정된 법으로 여성이 가해자를 고발할 수도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은 누구누가 다 알고있다.

3 강간에 대한 대중 매체의 관심은 대단하다.

덕분에 강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그에 맞먹으리라 생각되어 질 수 있다. 표적으로 강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듯 하지만 현실에선 여전히 강간에 대한 통념이 인식을 지배하고 있다. '어두운 밤, 골목길에서 낯선 남성이 나타나 혼자가는 젊은 여성을 폭행한다.' 하지만 실제로 강간이 무엇이며, 누가 무엇 때문에 누구를 강간하며, 그것이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에 대해 선뜻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이것은 강간에 대해 현실에서 존재하는 통념들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반증되지 않은 통념들은 강간의 실체를 축소, 왜곡하며, 그러한 통념들을 강화하고, 강간을 개인적인 일로 은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강간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강간이 갖고 있는 정치적 함의나 실천적인 측면에서의 강간의 예방을 위한 방향성 모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4 남성들에게 강간에 대해 물어보자.

그들은 격분하며 말한다. 무기를 가지고 위협하거나 죽도록 폭행을 가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저항하는 여성

을 강간할 수는 없다고 말이다. 그렇게 이루어진 강간은 강간이라기 보단 폭행으로 취급되고 그 이유로 단죄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 일은 자신의 도덕적 신념이나 태도와는 별개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자기들로써도 '불미스런' 사건이라는 것이다. 여자들의 의견도 이와 다를 바 없다.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핑계로, 혹은 정숙한 여인이 말할 만한 것이 못된다. 정말로 저항했는가, 라는 남성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한 듯한 태도를 보인다. 물론 강간의 책임을 그녀들의 짧은 치마, 도발적인 눈길, 호트러진 모습으로 돌리는 것도 아주 사실 무근은 아니다.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말인가? 그녀들의 옷차림, 태도, 性態 등은 그녀가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을 조금도 약화시켜선 안된다. 그건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다. 자신도 예외가 아니라는 현실 인식이 없는 한 강간당한 여성은 여성들 내에서도 배척받는 이중의 희생자가 된다. 희생자를 단죄하는 풍습은 역설적으로 가해자를 관대하게 대하는 태도로 나타난다. 풍습의 변화나 새로운 의상의 유행등에 대한 판결로 그것을 대신하고 있다.

5 사회속에서 여성은 항상 상징적으로 갈취된다.

여성은 시민, 아버지, 남편의 소유물일 뿐이다. 남성이 피땀 흘려 이룩한 세계속에서 여성은 이 '정복자'에 의해 보호받는 종속된 성에 지나지 않는다. 정복자 남성은, 하지만, 강간을 본능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둬서 자신을 동물성의 원형으로 두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강간의 중심에 선 남자를 단순한 희생자와 가해자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또 이것을 확대시켜 모든 남녀 관계를 적대시하는 것도 옳지 않다.

6 오늘날의 성은 자연스럽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되었다.

인간의 성은 조절가능한 것이 된지 오래이다. 강간의 원인으로 본능을 두는 것은 엄연한 인간으로서의 직무유기이다. 남성의 원초적인 불능에 대한 상징으로서, 강간의 충동은 여성에 대한 두려움, 거세의 불안, 그리고 그의 어린 시절의 굴욕들을 내뿜는다. 또 이러한 환상은 남성이 겁에 질리고, 미숙하며 좌절 할수록 더 자주 나타난다. 강간을 통해 '나는 남자다, 나의 남근적인 절대권을 보여주기 위해 나는 강간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여성은 강간되기 위해 만들어 졌으며 여성이 욕망하는 것은 오직 남근뿐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의 절대권에 복종해야 한다는 논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이 사회의 남성성의 척도는 여성을 얼마만큼 경멸하고 적대시 하는지로 나타나며, 그것은 단지 주먹질과 욕설로 끝나는게 아니라 '여성'을 더럽히는 것 까지를 완성으로 본다는 것이다. 여기서 희생되는 것은 조심성 없는, 혹은 운이 좋지 않았던 어떤 여성이 아니라 여성과 여성성 전체이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동물적 남성과 사회적 남성이

분리되어 결국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여성성은 더럽혀지고 그녀의 자유 결정은 무시되고, 품위를 훼손당하고, 자신의 존재이유에 상처를 입은 여성들, 이유없는 위협과 폭력에 의한 학대성 공간, 권위의 남용에 의한 공간은 존재한다.

제 2 부 ● 우리는 강간을 이야기 한다 / 57

제 2 부

우리는 강간을 이야기 한다.

1 강간을 두 종류로 나눠보자.

하나는 남성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야말로 원초적인 충동에의 복종으로 강간자는 그것을 제어할 수 없다. 이것이 흔히 말해지는 '남자는 할 수 없어'를 합리화시키는 논리이다. 다른 하나는 다양한 동기에 의한 의식적인 활동으로 여성의 능욕, 욕망의 충족을 위해 심리적, 사회적 구조를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남성에게 강간의 현상을 불러넣어 여성들에게는 강간당하고 싶은 욕망이 존재하기에 여성에게 강간을 행하는 것은 일종의 성적인 봉사라고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것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순식간에 뒤바꾸게 된다. 유혹받은 성, 요구받은 성이 남성이고, 단지 그런 이유에서 행해진 일이라고 주장한다면 강간의 책임은 뒤바뀌게 된다. 남성은 여성의 안전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성이라는 것은 가부장제 사회의 상식이다. 문제는 여성들이 이러한 상식을 문제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족적, 사회적, 정치적, 법적, 종교적으로 여성을 억압하는 남성적 구조에 대한 진정한 문제 제기 없이는 형식적이고 행정적인 개선만이 있을 뿐이다. 오랫동안 사회적 인식은 강간자에게 아주 관대했거나 무관심했다. 동기나 상황에 대한 인식은 문제되지 않았다. 봉건 영주의 '초야권'부터 현재의 직장 상사에 의한 강간까지 모든것은 당연히 계급 사회와 부합하는 행위로 간주 되었다. 이런 경우의 강간은 정말 상황이 '더러운' 것이다. 권력을 휘두르는 자의 법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인 위해가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상황에서 선택은 편하지 않은가? 밥 늦게 귀가하는 여성, 풍속을 어지럽히는 유행 의상을 입는 여성,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여성은 모두 자신을 성적 상품으로 내놓는 것이다. 부정하지 마라. 당신도 강간 피해자에 대해 이런 편견을 갖고있지 않은가! 다시 묻는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주인으로써가 아니라 다른이-아마 아버지나 남편이겠지-의 소유물로 간주되고, 어쩌다 운이 없으면 강간당할 수도 있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또 만약 타인에 의한 행위로 당신의 명예를 잃게 되어 다른 이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면, 이런 가장 운이없는 경우에 속하지만,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평생 당신의 잘못으로 남을 아이라도 태어난다면... 그래도 소위 '문란한' 여성을 탓할 것인가?

2 강간과 폭력, 강간과 성, 남성들의 폭력에 관한 여성들의 관계는 너무나 닮아 있다.

우리 사회는 철저하게 강자의 법을 집행하고 있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직업적, 가족적, 교육적, 도덕적, 정신적 억압위에서 사회가 세워지며, 그것이 법의 모든 단계에서 완전하게 실행된다. 의식하지 못하는 척하며 그것을 견뎌 낼 수도 있다. 혹은 그 시스템에 참여할 수도 있다. 단지 이것은 거기서 이익이 나온다는 계산이 이루어졌을 때이다. 직,간접적으로 자신에게 종속된 사람들에게 억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영원한 침묵의 증인'으로 머물 수 없다. 이런 이들은 공개적으로 반항하고 이러한 억압을 비난하며, 싸우고, 알리는 글을 쓴다. 이런 일들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3 강간은 단순한 일탈적 행위가 아니다.

생물학적 특성에서 비롯된 현상도 아니다. 사회화된 성의 속성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특히 강간이 아닌 사람에 의한 것일 경우 강간은 일상적 관계속에서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공통적 피해가 된다. 이 경우엔 대부분 사전에 계획된 강간으로 단순한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것이라기 보단 지배나 착취, 권력, 통제, 분노, 새디즘등의 여러 개별적 동기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다. 이 여러 개별적 동기중 여성의 소유와 성적 의도라는 두 측면에서 강간을 살펴보도록 하자.

4 육체의 정복이 정신적인 정복이라는 사고는 강간을 통한 소유, 통제의 기능을 의미한다.

더욱이 우리나라처럼 여성에 대한 순결 이데올로기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강간은 여성을 설득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 남성이 자신의 일반적인 성적 의도를 만족시키려는 동기에서 강간을 하는 경우 그것은 '성의 착취'를 의미한다. 성적 의도란 자신의 성욕구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충족시킬지를 미리 고려한다는 전제를 포함하여 단순한 생물학적 성충동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직장 상사에 의한 강간 사례는 남성이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여성의 성을 강제하고 착취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남성들의 태도는 여성의 성은 '일회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이런 경우를 진짜강간(real rape)으로 증명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바로 강제와 저항의 문제이다. 일상에서 일컬어지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 곧 성관계에서의 능동성과 수동성으로 연결되는 성차별적 사회화 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남성의 강제와 여성의 저항은 일반적인 성관계에서도 예상되는 각본이다. 때문에 강간에서의 강제와 저항이 성관계에서의 그것과 같지 않음을 증명해 보이기란 매우 어렵다.

5 이에 저항이 통제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강간도 있다.

이 경우엔 가해자의 강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육체적·물리적 강제, 심리적 강제, 사회·경제적 강제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육체적·물리적 강제로 말 그대로 육체적인 힘이나 무기에 의한 가해자 일방의 폭력적인 강제를 의미한다. 실제로 강간에서 폭력은 그 정도나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대체로 일반적인 상황이다.

다음으로 심리적 강제가 있다. 이 경우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 관계속에서 가능하다. 심리적 강제로 해서 육체적·물리적 강제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여러가지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위축되어 가해자

의 육체적 강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심리적 강제의 경우 육체적 강제는 여성의 위축된 저항을 제압할 정도면 가능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여성의 저항은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진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사실상의 육체적 강제 이전에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한 당혹감이나 심리적 공포로 저항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 이를 심리학자인 Suarez와 Gallup은 가해자의 갑작스런 공격에 의한 피해자의 극심한 공포와 순간적인 몸의 마비는 공격을 받은 동물의 최면 상태와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이와는 다른 방향으로 예정을 담보로 한 성관계의 강요를 들 수 있다. 예정 상실의 심리적인 위협에 의해 교제중인 남성의 강요에도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로, 상대와의 친밀도 때문에 강간으로 인식되지 못하기 쉽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강제를 들어보자. 성차별적 사회에서 여성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낮은 지위에 있다. 특히 노동 시장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불리한 위치에 있다. 여성 노동자의 대부분은 남성 고용주나 상사의 밑에서 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강제는 강간을 위한 매개 고리로써, 혹은 여성의 저항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피해자의 심리적 위축을 가져와 저항을 감소시킨다는 면에서 심리적 강제와도 연관된다.

일반적으로 강간에서의 저항은 피해자의 동의 유무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되기 때문에 충분한 저항이 증명되지 않으면 '진짜 강간'으로 인정받기 힘들다. 그런데 심리적 강제와 사회·경제적 강제는 피해자의 주관적 경험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비가시적 폭력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강간에서 피해자의 저항을 중요시하는 것은 '여성이 저항하면 강간은 없다'라는 일반의 통념과 어떠한 경우에서도 여성은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규범이 우리 사회에 지배적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이렇듯 강제에 의해 강간의 피해자가 된 여성들,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강간에 대한 체험 인식은 '성관계를 했다'는 것과 '육체적 대상화의 경험'이라는 것이다.

6 '더럽혀졌다'라는 말은 강간이 성관계라는 인식을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

피해자나 사회의 이러한 인식은 남성 중심적인 것으로, 일방적인 성기 삽입만으로도 성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개념을 내면화하여 강간이라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폭력적·일방적·굴욕적 대상화의 경험을 일상적 성관계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서 문제가 된다. 이는 강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피해자 비난 논리'를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들의 경험이 남성들의 시각을 통해 규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성관계를 했다'라는 인식은 순결 상실 의식으로 연결된다. 강간에 대한 법 조항의 명칭이 '정조에 관한 법'이라는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강간범에게 '가정파괴'라는 죄명을 씌워 단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여성의 정조 가정의 유지에 필수조건이며 여성 자신과 가족성원 모두에 의해 지켜야만 하는 어떤 것, 나아가 여성은 그러므로 항상 보호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인식된다는 것을 뜻한다.

1) 법적 개념

법적 개념은 성폭력의 행위들을 각각 분리된 것으로 보고 양분법적 접근을 하고 있다. 성폭력의 유형 범주에 드는 강간, 강제 추행, 인신매매, 음란물 제조 판매, 아내 구타, 성적 회롱, 아동학대, 성기 노출 등이 각각 다른, 분리된 행위로 개념화된다는 것이다. 양분법적 접근을 한다는 것은 성폭력 형태에 대한 정도의 고찰 없이 단순히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 개념으로는 성관계전의 동의와 남성 성기의 삽입 행위만을 따지게 되고 그 결과 대다수의 성폭력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또 대부분의 경우를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여성을 육체적, 성적 약자로 규정지을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으며, 기타의 가능한 강간, 남성의 남성에 대한 강간이나 여성의 남성에 대한 강간의 경우를 배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 중립적인 개념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여성학적 개념

강간에 대한 초기의 여성학적 논의는 어느정도 강간의 법적 정의를 정점으로 삼으면서 명시적인 폭력과 힘의 사용에 초점을 두었다. 이 논의의 한 측면은 강간이 성범죄가 아니라 폭력적 공격의 한 형태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학자들이 이성애의 구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강제된 성과 동의된 성의 공통성이 나타났다. 이것은 논쟁을 섹슈얼리티의 영역으로 되바꾸었고, 강간의 정의는 이성애의 비판과 분리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여성학자들이 여성의 피해대 경험에 관심을 두게됨에 따라 그들이 시작한 개념 규정이 확장되었고, 이전에는 이름도 없었던 학대를 명명하기 위한 새로운 단어들도 발달하였다. 동시에 여성학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남성 폭력을 각각의 분리된 현상으로 보는데서 벗어나 '성폭력'이라는 보다 일반적 현상의 일부로 보게 되었다.

7 성폭력에 대한 이론의 전개 과정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은 남성적 편견이 가장 체계적이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이다. 성과 성역할, 폭력의 이해를 위한 여성학자의 연구를 찾아보면 1970년대에 여성학에 있어 중요한 개념 변화가 나타났음을 일수 있다.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의 개념이 구체적 유형의 폭력을 각각 분리하여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 남성 폭력 전반을 하나의 통일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쪽으로 옮겨 갔다는 것이다. 즉, 가부장적 남성 우월 사회의 분석에 폭력 자체에 더 큰 우위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1970년대 초는 남성 중심적 사회학과 초기 여성운동이 강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시기인데 이 시기의 여성학자들은 남성 지배는 다양한 사회, 경제, 정치, 이데올로기적 제도와 관행에 기반하며 이 모든 제도와 관습은 남녀 모두에게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현대에 이르러 '힘'은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통제와 주요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 억압의 책임은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사회의 탓으로, 남성 개개인이 아니라 남성 지배적 제도에 의해 남성성과 여성성을 양극적인 성질로 보는 문화적 구성의 탓으로 돌려 졌다. 그리하여 기존에 남성의 공격적 본능이나 신체적 힘으로 설명하던 남성권력의 원인이 현대 자본주의에 기반해서 찾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남성지배의 원인분석에서 남성 폭력이 제외될 순 없었다. 강간은 여성의 신체적, 성적 존재를 근본적으로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자결권의 원칙을 여성 인생의 더 많은 부분으로 확장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었다. 이 시기의 여성학자들은 모호한 유형의 여성 학대-착취, 협박으로 인한, 신체적 폭력이 덜 개입되는 부분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최근 여성학자들의 이론과 연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정점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1. 힘과 폭력은 남성지배 유지의 주요 수단이다.
2. 힘과 폭력이 남성지배 유지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남성 폭력의 갖가지 표현 양태를 각각의 분리된 현상으로 볼 것인가, 일반적 유형이나 과정의 부분으로 볼 것인가?
3. 섹슈얼리티와 이성애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이 폭력, 권력 및 남성에 의한 여성 통제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제 3 부

지금 우리는 강간을 이야기 한다.

1 강간에 대한 이야기 하나 - 성폭력에 관한 법률들

형법 제 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8조 (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 ① 추행, 간음,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취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도 전항의 예와 같다.
- ③ 상습으로 전 2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89조 (국외 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 ①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약취, 유인, 매매된 자를 국외로 이송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 ③ 상습으로 전 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0조 (예비, 음모) 전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1조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 결혼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제292조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 ① 제288조 또는 제289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제287조 또는 제291조의 약취 또는 유인된 자를 수수 또는 유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3조 (상습범)

- ①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전항의 형과 같이한다.

제294조 (미수범) 제287조 내지 제289조와 제291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88조, 제289조, 제292조, 제293조와 그 밖의 미수범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6조 (고소) 제288조 제1항, 제292조 제1항 또는 제293조 제2항의 각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의 목적으로 약취, 유인, 수수 또는 은닉한 죄, 제291조의 죄와 그 미수범은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형법 제 32장 정조에 관한 죄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저항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 (미수범) 전 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 (강간등에 의한 치사상) 제29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으로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을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5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4조 (혼인빙자등에 관한 간음)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만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5천원의 벌금에 처한다.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또는 제301조의 예에 의한다.

제306조 (고소)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전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2 강간에 대한 이야기 둘 - 김보은·김진관 사건에 나타난 성과 권력

브라운 밀러는 그녀의 강간연구에서 아버지와 딸의 근친상간도 남성과 여성의 힘의 불균형에서 파생된 강제의 형식이기 때문에 강간의 한 부분으로 봐야하며 따라서 근친상간(INCEST)이라는 용어 대신에 아버지 강간(FATHER-RAPE)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근친상간의 피해자 80%가 여자 어린이고 그중 80%가 12세 이전에 처음으로 근친상간을 경험했다고 할때 근친상간보다는 '근친강간'이 현상을 보다 적절하게 설명해주는 용어라 하겠다. 하지만 실제로 근친상간에서 강제와 동의를 구별하여 그것이 근친강간임을 증명해 보이기는 쉽지 않다. 강간은 경험안에서 확인되는 것이고 근친 강간에 대한 사회적 이론을 재구성해내기 위해선 가족관계와 남녀관계, 아동과 성인 사이의 관계, 성, 욕망, 사랑, 권력, 지배 등에 관한 개념정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금기시 되고있는 상황에서, 경험에 근거한 개념들의 재정립은 거의 불가능하다. '김보은-김진관 사건'은 내용 자체가 화제가 되어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각 계층에서 형성된 다양한 담론이 형성되었다는 자료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각 담론을 살펴보고 푸코의 담론 구성의 관점에서 담론들 간에 여성의 성, 사랑, 가족, 욕망, 정의, 자율성의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고 충돌하고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담론들 간의 충돌과 대립의 과정을 통해 여성의 성의 의미가 권력관계를 통해 재구성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형성된 여성의 성과 그에 대한 저항 담론의 전략이 무엇이며 그 한계와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나타난 성과 권력

김영오는 김보은이 어렸을 때는 김보은을 완전한 사물로 취급했지만 김보은이 성장하면서 김영오는 점차 김보은에게 집착하게 되었다. 처음의 추행후 김보은의 행동거지를 감시한 것은 성추행 사실의 발각을 우려해서였지만 김보은의 성장 후에도 감시를 한것은 김보은에 대한 집착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영오는 김보은이 자신의 의지로 김영오의 것이 되기를 바랐다. 이것은 강간할때 김보은의 반응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김영오는 김보은의 성적 반응에 집착하게 된다.

김영오는 김보은이 6학년때부터 사건 전까지 약 1,000개의 포르노 비디오를 봤는데 김보은에게도 포르노비디오를 보여주며 억지로라도 김보은의 반응을 유도해내려고 했다. 김보은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자 김영오는 김보은을 요정에 데려가 술집여자나 자신의 성행위 장면을 보여주며 술집여자의 반응하는 모습을 배우라고 했다. 김영오는 김보은이 우울한 표정을 지으면 식구들을 구타하거나 욕박지르고 김보은에게도 구타와 항문성교를 하였다. 김영오에게 김보은이 자기것이라는 확인은 성행위를 하는것이며 그 일에는 김보은의 동의가 필요했고 그것이 안될 때, 동의한다는 가장이라도 보여주어야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김보은의 동의를 통한 소유가 불

가능해짐을 알고 아이를 갖게하여 김보은을 영원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기가 있다면 동의를 받는 것이 더 쉬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영오는 김보은을 자신의 힘만으로도 손아귀에 넣을수 있었는데 무엇때문에 김보은의 동의를 필요로 했고 그 반응에 집착한것일까? 김영오는 자신이 부정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만일 김영오가 김보은을 완전히 부정했다면 김보은의 반응에 집착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김보은의 의지가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보은을 소유한다는 것은 김보은이 전적으로 부정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배할 대상이 없는 상태에선 김영오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영오가 김보은을 철저히 지배하고 사물화 하면서도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김영오가 부정할 수 있을만큼의 김보은의 자율성 확보가 요구한 것인데 이를 위해 김영오는 구타와 변태적인 강간, 감시를 통한 지배와 더불어 김보은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배려를 보였다.

김영오가 김보은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은 가부장제적 자본주의가 배출하는 인간본성의 경계를 보여준다. 자본주의 핵가족을 통해 배출되는 성별 정체성은 나와 남과의 경계를 강조함으로써 확보되는 남성성과 나와 남과의 융화를 강조하는 여성성으로 분화되면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의 관계에서 각기 분리 아니면 융화의 한 면만을 보여주었다. 남성과 여성은 양극화된 전체에서 각기 부분의 역할만을 함으로써 누구도 진정한 독립을 얻지는 못한다. 남자가 각기 이상적인 주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녀관계는 복종과 지배의 형식으로 재현 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김영오가 복종과 지배의 형식으로 김보은과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면 김보은 또한 김영오를 인정해야만 한다. 검찰은 김보은이 김영오를 피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것을 김영오가 제공하는 댓가-스키, 운전, 골프, 해외여행-를 받아서거나 진관을 만나기 전까지는 김영오와의 관계에 거부감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지를 확인하려 했다. 김영오의 행위는 김보은의 동의없이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나와 대상간의 분리를 전제로하는 합리적 인간관을 내포하고 있다. 즉 김보은의 상황인식이 김영오에 대한 김보은의 대응이라고 본것이다.

▶ 가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 나타난 성과 권력

김영오의 행적을 보면 사회적 권력에 대한 지향과 여성에 대한 비하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김영오는 사건당시 검찰 서기관의 지위에 있으면서 충주지청 서무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늘 검찰의 위세를 보여주겠다고 말하며 철저한 권위 의식을 보여주었다. 김영오의 권력은 집안 식구들에게, 특히 김보은에게는 절대적인 것으로 보였다. 김영오의 권위의 원천은 사회적 지위로 김영오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위약과 칼을 준비해두고 '공직자로 두번의 이혼 경력을 가질 수 없다'며 어머니나 김보은이 도망가면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그런데 김영오가 갖고있는 남성들간의 서열의식과 여성비하의식은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다. 주변에서 김영오

를 저지할 수 없었던 것은 김영오의 사회적 권력 때문이었다. 김보은의 어머니가 김보은의 강간사실을 알고 시아버지와 김영오의 친구와 장남 정식에게 도움을 청했다. 시아버지는 자기가 김영오에게 생활비를 타 쓰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피했으며, 친구는 그의 성격이 난폭함을, 정식은 그가 자기 아버지임을 들어 도움주기를 거절했다. 또한 문제의 성격이 남성들끼리의 위계적 질서를 위협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남성들의 공동의 지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여성/가족의 문제였기때문에 이들의 소극적 대응이 가능했다.

김영오가 남성과의 관계에서 철저한 서열의식을 보이면서 사회적 지위가 점차로 상승하게 되는 것과 한편으로 여성에 대한 성적착취를 지속했다는 것이 서로 마찰을 일으키지 않은 것은 설명이 필요하다. 김영오의 여성 착취 방법은 철저하게 가부장적이다. 그는 규범세계의 여성과 비규범 세계의 여성 모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가부장제적 규범을 통해 성적 착취를 행했다. 김영오는 가부장제 안에서의 가족에 대한 여성들의 규범을 간파하고 그것들을 이용했다. 김보은의 어머니를 만난 것은 김보은이 7세때 일본에 취업하려는 김보은의 어머니에게 둘째아들의 생일상을 차려달라며 결혼을 청했다. 김영오는 김보은 어머니의 모성에 호소하면서 자연스럽게 재혼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김영오의 사회적 권력과 가족내 권력은 서로가 서로를 강화하는 관계였다. 부권과 사회적 권력의 교차점에 김영오의 가족이 위치하고, 이 가족의 경계에 자리한 김보은은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 가족주의의 경계에 대해 우리에게 묻고있다. 김보은은 가족의 해체에 앞서 회생을 강요당했다. 그러나 그가 유지하려 애쓴 가족의 경계는 김영오의 죽음후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만다. 그렇다면 김보은이 그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지켜가려 했던 가족의 의미란 무엇일까? 그 가족이 우리 사회에 실현될 가능성은? 김보은 사건은 우리에게 가족에 대한 새로운 답문을 요구한다.

▶ 법정에 나타난 성과 권력

김진관·김보은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볼 것인가, 의도적인 살인으로 볼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재판과정 내내 중심을 이루는 것이었다. 각 답문을 규정짓기 위해선 김보은이 김영오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내야만 했다. 원심에서 검찰은 김보은이 김영오를 떠나지 않은 것은 '성의 쾌락'에 있다고 보았다. 김진관을 만나기 전에는 김영오 대한 거부감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을 통해 검찰은 김진관과 김영오를 동가에 놓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김보은에게 '성의 쾌락'을 제공해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본 것이다. 또, 김보은에게 자기보호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검찰이 전제로 하는 자기방어능력은 자율적인 개인에 근거한 개인의 윤리 혹은 정의의 윤리이다. 반면에 변호인단은 김보은이 김영오를 떠나지 않은 것을 김영오의 '포악성'에서 찾고 있다. 김영오의 상상을 초월하는 성적 폭행, 구타 끊임없는 감시와 통제가 김보은으로 하여금 떠날 엄두도 못내게 한 것이다. 김보은은 '정조권 및 자유권적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고 따라서 김보은이 김영오를 살해한 것은 정당방위였다고 한

다. 동시에 김보은과 김진관의 살인행위는 인간의 본성과 가족의 경계를 수호한 '윤리적 행위'였다고 주장한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에서의 '성의 쾌락'원리와 개인의 독립성에 기반한 개인의 윤리를 주장하면서 원심에서 변호인단이 주장한 '윤리적 행위'의 틀을 수용하여 개인적 윤리를 강조하는 전략을 쓴다. 김보은이 김진관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더럽혀진 몸을 주지 말았어야 하는게 아닌가? 누구보다 딸에게 성행위를 강요했던 엄마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김영오가 잘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김보은은 매일 명랑하게 다닐 수 있었을까? 검사는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변호인단이 제시한 도덕성의 윤리로 볼 때 김보은은 도덕성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은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하며 김보은의 어머니는 도덕적 무지의 전형이 된다. 더 나아가 검찰은 여성의 사랑은 순결을 전제로 하며 그것만이 쾌락과 사랑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라고 보고 김진관과 김보은의 사랑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김보은이 비도덕적이라는 검찰의 답문을 수용한다. 변호인단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김진관과 김보은의 정신상태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을 내세운다. 김보은과 김진관에 대한 정신감정이 의뢰되고 의뢰계는 김보은의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다. '만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속칭 노예의 정신 상태, 폭력에 대해서 노예가 된 정신 상태'라고 진단하였다.

김보은은 법정에서의 증언이나 그 이후의 삶의 과정에서나 일관되게 주위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 자신과 구체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규정하는 여성성은 김보은의 상황 인식의 특징이다. 따라서 검찰측이 주장하는 '개인의 윤리'의 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김보은의 '배려의 윤리'도 검찰, 변호인단, 여성계, 의료계 등의 답문에 속하지 않는다. 김보은이 우리사회에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윤리를 지니고 있거나 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의 위치에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여성은 피해자이고 남성은 가해자이기 때문에 여성을 보호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보호받는 여성과 공격하는 남성이라는 전형적인 성의 이중규범이 자리잡고 있다. 법조계와 의료계의 답문은 남성과 같은 여성만을 인정해 실제의 여성 존재를 인정하지 않지만 여성계의 답문은 남성이 다른 여성의 공간을 확보해 주는 대신 여성은 보호받아야 할 수동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측의 답문을 따라 김보은을 자율적인 개인의 윤리를 지닌 '정상인'으로 규정하였다. 의료계의 답문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들을 직접 면담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범행 당시의 상황, 재판 과정의 피고인들의 언행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사건 당시 사물을 식별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단의 양형부당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고 대신 계획 살인이라는 검찰측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 이로써 재판부는 김진관의 사랑을 '성의 쾌락'으로 규정지은 것이다.

김보은·김진관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된 답문들은 두 가지 유형의 '정상적 여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첫째는 전형적인 유형으로 여성적 특징을 전혀 내세우지 않는 남성적 여성이고 둘째는 새롭게 여성적 특징을 내세우긴 했지만 남성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여성이다. '여성의 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정치, 문화적 각본은 보다 보편성을 띄 '정상적'인 여성의 출현을 막고 있다.

3 공간에 대한 이야기 셋 - 매맞는 아내의 경험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사회문제 중의 하나는 폭력의 만연이다. 특히 아내 구타, 성폭행, 근친상간 같은 여성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날마다 신문에 보도되고 있으며 우리 모두를 경악케 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다양한 학대에서 보호받을 권리, 즉 안전할 권리가 있는데도 이곳저곳에서 무자비한 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평화로운 안식처로 상징되고 있는 가정에서는 이율배반적으로 이러한 폭력이 합법화되고 정당화되어, 학대받는 아동과 아내는 안전할 권리에조차 제외되었다.

폭력이란 '합부로 난폭한 행동을 하는 힘'(동아출판사, 1970)으로,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체적, 물리적, 언어적 상해를 포함하고 있다.

가정 폭력은 많은 아내와 자녀들의 정신과 신체에 심각한 상처를 반복해서 입히고 매맞는 아내의 삶을 상실하게 만들 뿐 아니라, 폭력적인 자녀를 키워내서 사회를 파괴하는 데까지 이른다는 폭력의 악순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가정 폭력의 한 종류인 아내 구타는 자녀에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 폭력밖에 없다는 것을 학습하게 하므로 남자는 커서 학대자가 되고, 여자는 학대받는 여성이 되는 비율이 커지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아내 구타 문제는 1960년부터 평등 사회를 모색하려는 인권 운동과 여권 운동의 한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났다. 가정 폭력과 아내 학대에 관한 연구는 미국, 캐나다 같은 곳에서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학대자의 피학대자에 관한 연구, 폭력에 관한 연구, 학대의 특성과 역동성에 관한 연구 등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리고 임시 쉼터, 정신 건강 센터, 가정 상담과 개인 상담, 특별치료기법 같은 중재도 실시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정신과학, 사회사업학, 여성학, 가정학, 신학에서 부분적으로 연구를 하고, '여성의 전화'와 '쉼터', '은강자매복지회'들이 생겨 실제적인 중재를 조금씩 하고 있으나 간호학에서는 우리 나라의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폭력은 폭력 행사자, 폭력 희생자, 그리고 이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된 건강 문제이므로 간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인간의 건강 관리 전문직으로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정 폭력에 대한 정보와 치료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하며, 이런 지식을 사용하여 여성들이 그들의 삶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간호사는 여러 상황에서 매맞는 아내와 만나게 되어도, '폭력'에 대해서는 대부분 회피하고 드러난 상해만을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간호학에서 폭력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통해 이에 대한 연구와 중재를 한다면 여성 한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 사회, 국가와 세계의 건강과 평화에 긍정적 기여를 하게 되리라 여기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간호학은 아내 구타에 대한 지식 체계에 기여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아내 학대, 아내 구타, 아내 폭력 혹은 가족 문제, 가정 폭력 등의 개념은 학자나 실무자간에 완전히 합의된 정의가 없이 쓰이고 있다. 아내란 말은 꼭 결혼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한 남자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성에게 쓰인다. Parker와 Schumacher(1977)는 매맞는 아내 중후군을 "어떤 시점에서 남편으로부터 고의로 심각하게 그리고 반복해서(3회 이상) 상해를 받은 여성의 복잡한 폭력 중후군"이라고 정의하였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정 폭력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비폭력적인 것으로 사회적으로는 정의되어 왔으나, 실상 가정 폭력은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가정은 폭력적 행동에 대한 원초적인 훈련장이 되어 사람들은 가정에서 더 쉽게 폭력을 보거나 저지르며, 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가정 폭력에는 배우자 학대, 어린이 학대, 근친상간, 결혼 속의 강간, 부모 학대들이 포함되는데, 그중에서도 아내 구타에 대한 문제는 1950년대 이후 일어난 인권운동과 여권운동의 하나로 활성화되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사회나 학문에서 아내 구타를 문제로 여기게 된 것은 1970년 전후의 일로, 여성이 지금까지의 차별적 사회 구조에서 벗어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출발은 신체적 폭력에서 해방되는 것이라는 깨달음에서,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아내 학대 문제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었다. 지금까지 아내 구타가 드러나지 않은 이유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타할 권리를 남편이 합법적으로 갖게 하는 남성 중심의 문화 규범에 있다.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의존되어 있고 문화적, 종교적으로 구속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므로 가정 외에는 대안이 없으며, 사회적 불명예와 대중에 대한 부끄러움, 학대자로부터 예상되는 폭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문제를 감추고 있는 것이다.

아내 구타에 대한 캐나다 통계 자료를 보면, 가정 폭력 사례 중 72%가 아내 구타이고 살인의 20%는 배우자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한 보고에 의하면 10명 중 1명이 매맞는 아내라고 한다. 가정 폭력에 대한 또다른 통계에 따르면 3-4백만 미국 여성이 해마다 남편, 전남편, 남자친구, 애인에 의해 구타당하며, 되풀이되는 심한 구타는 모든 결혼한 부부의 10-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경우 부부 폭력이 나타나는 빈도는 상당히 높는데, 결혼 뒤 남편에게 맞은 경험이 있는 아내가 42-61%이다. 지난 일년 동안 25%의 아내가 발로 차이거나 물이 뜨거거나 주먹으로 맞았고, 19%가 흉기로 맞았으며 4%가 칼이나 무기로 상처를 입었다는 보고도 있다.

아내 학대 행위는 새로운 행동 양식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모든 문화권에서 발견되어 온 현상이었으나 최근까지 어떤 분야에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은폐되거나, 남몰래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져서 부추겨 왔다. 아내 학대는 족장 체제에서 비롯, 여자는 물물 교환의 대상이 되었고 소유권이 부모에게서 남편에게 넘어가므로 학대가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이렇듯 여성에 대한 잘못된 대우는 어디에나 늘 있어 마녀를 불태우고, 발을 묶고, 음력

절제를 하고, 강간하고, 또다른 종류의 성적 폭력을 하는 따위의 그 형태가 다양하다.

아내 구타는 어떤 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고 다차원적으로 설명해야 이를 잘 설명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개인 심리적 접근, 가족 체계적 접근, 사회 학습 이론과 사회 구조 이론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 심리적 접근은 학대 관계에 있는 남편과 아내의 개인적 인성의 특성에 관한 것으로 정신병리학과 알코올, 약물론이 포함된다. "때맞는 여성은 때를 때리게 부추기는 노릇을 하며 피학중 환자로서 이를 즐긴다. 또는 순교자이며, 한번 때맞는 여성이 되면 항상 그렇다. 때맞는 여성은 때맞는 아이였다"는 아내 구타에 대한 잘못된 신념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Freud는 여성을 남근이 없는 여성으로 수동적이고 결합이 있는 존재라고 설명하였다. 그밖에도 알코올, 약물이 구타의 원인이라는 설이 있으나 이것은 촉진 요소일 뿐 진짜 원인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가족적 접근은 아내 학대 행위를 큰 사회 체계의 한 부분인 가족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는 것으로, 구타 행동을 체계 안에 이미 존재하는 상호 작용 양식의 결과로 본다. 그리고 일반 체계 이론의 원리에 따라 여성들은 학대를 당해도 체계의 유지를 고통보다 중요하게 여겨 그 자리에 머물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 학습 이론은 폭력 행동을 학습된 현상으로 설명한다. 한 사람이 타인의 폭력 행위를 보고 따름으로써 새로운 공격 행위를 배우고 점점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 없이 폭력을 쓸 수 있다고 하였다. 사람은 폭력을 보고 폭력 행동을 배울 뿐만 아니라, 폭력을 당한 경험에 의해서도 폭력 행동을 배울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은 가족원에게 모방과 역할 표본의 본보기로 보여 강대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 구조 이론은 여성을 억압하는 전반적인 가부장적 사회 제도가 아내 학대에 가장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사회 제도를 가족 제도, 경제 구조, 법 제도들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 문화는 여성들에게 결혼을 최고의 이상으로 삼도록 강요하며 결혼의 실패는 여성으로서 실패한 표본이라고 믿도록 사회화했다. '내혼'이나 '현모양처'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여자는 하나의 인격체라기보다는 남자의 종속물 또는 부속물일 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편의 학대 행위를 가정의 유지를 위해 참고 지내게 되며, 학대 행위 자체보다도 그것을 문제로 여겨 도움을 청하거나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행위를 더욱 일탈적 행위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성과 마찬가지로 가족이라는 것도 자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문화적 산물이며, 기존의 사회 유형은 지배자의 이데올로기적 작용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학대 행위를 단순한 이타 행위나 병리적 현상으로 보지 말고 그 근본 원인이 사회적 맥락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폭력을 되풀이 겪게 되면 희생자인 여성은 인간 정서의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예를 들어 낮은 자아 존중감, 패배감, 혼란된 감정, 무가치함, 죄책감, 조절감의 상실, 외로움, 고립감이나 자기 신체의 무가치함과 천함 등이다.

특히 임신중에 폭력이 있음이 널리 알려졌는데, Gelles의 연구는 때맞는 여성의 25%가 임신중에 맞은 사실을 밝혀냈고, Stacy와 Schupe는 피난처에 있는 542명에 대한 연구를 통해 42%가 임신중에 복부와 생식기를 맞았다고 보고했다. 이들은 다른 여성들에 비해 자연 유산을 많이 하고, 폭력 후의 대처 방안으로 약물과 술을 먹기 시작한다는 것이 나타났다.

위와 같이 혐오스런 상황과 함께 학대자의 사죄, 친절, 사랑스러운 행동은 가끔 부부간에 깨뜨리기 어려운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만들어 때맞는 아내로 하여금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남편의 사죄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가정을 떠나 가정이 파괴되면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죄책감이 들어 이혼을 못하게 된다.

Brown 등(1982)은 학대받는 여성들은 특징적으로 부정적인 자아상을 초년기에 발달시켜 열등감을 지니거나 성차별적인 신념 같은 잘못된 신념을 믿는 경우가 많고, 가정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전통적인 준거들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여성이 전통적인 이데올로기를 강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때맞는 상황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고, 반대로 회의를 느끼면 더 나은 상황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Pagelow의 가설과도 일치한다.

Gelles와 Macleod는 폭력의 횟수와 정도가 적을수록, 어릴 때 많이 맞고 자랄수록, 부인이 가진 자원이 적을수록, 힘(power)이 적을수록,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중재가 효과 없을 때 학대받는 여성은 남편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는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남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절망감, 무기력의 감정에 사로잡혀 치료를 잘못된 희망으로 보며, 날마다 삶에 위협을 받아 단지 구체적인 욕구만을 느끼고 상담 치료에 가치를 두지 않으며,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에 정신과 환자라는 명칭을 더하는 것에 대해 저항하기 때문에 치료를 거부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건강 전문가는 대상자의 불안 원인에 대해 알고 그들이 그 문제에 직면하도록 하는 중재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MOVIE

기획의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질서속에서 나날이

거대화 되고 있다.

이런 문화 안에서 진정한 창조를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비상업성과 작가정신을 발현하는 독립영화속에서

놓쳤던 우리의 문화정신을

찾아보도록 하자!

2 독립영화에 대한 정의와 제정규를 연구하는 의의성

- 한국영화진흥위원회(한국영상자료원)의 독립영화정책

제 1 부

이제 독립영화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1 한국영화의 통제구역

- 비상업성과 작가정신의 발현, 한국의 독립영화

문화는 그 시대 사회의 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질서 및 가치체계를 반영할 수 밖에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상업주의의 정신은 우리 문화의 모습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리고 문화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조정되고 통제되기에 자본주의의 부산물로서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문화라는 것은 하나의 정형화된 모습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변화의 물질에 의해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주류의 문화에 편입되지 않고 자신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건강한 움직임들이 있어야 한다. 이런 소수의 문화들이 변화를 일으키고 진정한 '창조'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문화 안에서 이런 문화의 속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영상 매체이다. 그 중에서도 독립영화라는 부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 영화계의 실정은 영화를 고부가가치의 창출 상품으로 여기고 최대의 이윤창출의 도구로서 영화계에 진출한 대기업의 횡포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미국 영화 시장 잠식으로 인한 문화의 식민지화라는 부분과 영화의 오락화 경향에 의해 문화의 진지함을 상실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대안적이고 주체적인 문화로서 역할할 영화문화를 만들어 내야한다. 미국지배 이데올로기를 일방적으로 전파하는 미국영화에 대항할 주체적인 우리 영화, 대기업의 상품화 전략에 편승한 오락영화에 대안적인 건강한 영화, 진지한 영화들로 우리의 소리를 내야한다. 이런 주체적, 대안적 영화가 존재해야 우리 영화문화가 올바르게 서게 되는 것이다.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우리의 영화를 보려하고, 우리와 우리 주변을 담은 영화를 진지하게 만들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토대로 궁극적으로 대중적인 창작, 표현, 보급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다가오는 시대의 영상문화를 주체적이고 바람직한 민주적 문화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영화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이런 맥락에서 이번 강의를 기획하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의 시작점이 되어 넓고 깊은 파장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다시 하나로 모여 제대로 된 소리가 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이 시도가 얼마만큼의 설득력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문제 제기를 해 줄 수 있을 지는 가늠할 수가 없다. 그래도 이번 강의에서 단 하나의 믿음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영화를 사랑하는 이름으로 영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믿음이다. 이런 전제 아래에서 우리 영화는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2 독립영화에 대한 정의와 개념규정

- 한국 독립영화의 특징을 독립영화의 역사 속에서 고찰한다.

한국 독립영화의 정신 80년대 초반 폭압적인 군권통치에 의해 국민 일반의 정치적 권리가 위협을 받는 동안, 그리고 제도권의 상업 영화가 사전심의에 제갈이 물려 침묵하고 있는 동안, 영화도 정치사회현실에 대해 '발언'해야 한다는 자각과,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한 한국 독립영화는 "홍행이라는 이름아래 일부 도락적이고 명목적인 관객을 위해 다수 민중을 학대한" 제도권 영화의 밖에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삶과 사회적 진실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하여 삶의 총체적이나 반성과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강렬한" 영화를 만들기 원했던 이들은 소값 파동으로 피해져가는 농촌의 현실을 (<파랑새>/8mm/서울영상집단/1986), 끝없이 미상을 밟아야 하는 한 여성 노동자의 꿈을 (<노란깃발>/16mm/18분/서울예전, 장동홍/1987), 시위 진압 전경으로 복무한 복학생의 심리적 현실을 (<그날이 오면>/16mm/13분/1987), 시국관련 구속자들에게 가해졌던 고문의 폭력성을 (<인제를 위하여>/8mm/45분/한양대 '소나기'/1987), 대학 내 프락치 활동을 했던 사람의 양심선언을 (<친구여, 이제는 내가 말할 때>/16mm/이상인) 영화에 담았다. 이렇듯 8mm, 16mm 필름에 기록된 당대 정치사회적 현실은 농촌과 대학, 소극장에서 '특정'한 관객들에게 저항의 칼날을 베풀도록 하였다.

지배권력의 '아킬레스건'이었던 1980년 광주항쟁에 대한 영화적 형상화 <오! 꿈의 나라>(16mm/90분/장산꽃매/1989), 19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들불처럼 번져간 노동조합 결성과정을 전형화해 당대 노동현실의 본질을 묘사한 <파업전야>(16mm/100분/장산꽃매/1990), 대중적 통일운동의 고양과 이에 연루된 학생운동가의 갈등과 고민을 담았던 <어머니! 당신의 아들>(16mm/청년/1991), 전교조 결성과 합법화를 둘러싼 선생님 과 아이들의 이야기를 극화한 <단한 교문을 열며>(16mm/장산꽃매/1992) 등 연속적으로 장편영화가 만들어졌던 90년대 초반은 한국 독립영화의 전형성이 획득된 시기이자, 독립영화의 존재가 대중들에게 뚜렷하게 각인된 시기이기도 했다.

민감한 정치사회의 소재, 전형화를 특징으로 한 직접적인 발언양식, 대학과 공장 등 독자적인 경로를 통한 관객과의 만남 등으로 요약되는 한국 독립영화의 전형성은 태생부터 한국 독립영화가 자임한 사회적 임무를 수행하려는 노력의 결과였다. 비민주적인 정치권력에 대한 저항과 체제변혁적 저항을 이념적 토대로 노골적인 '정치적 검열과 자본의 개입'에 정면대응한 독립적인 제작과 유통을 통해 획득되었던 것이다.

3 90년대 독립영화의 범주적 기초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 한국 독립영화가 다다르던 정점의 한 상징인 <파업전야>가 '전설'로 여겨질만큼 독립영화는 더 이상 영화운동의 다른 이름으로 읽히지 않는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 이질문의 대답은 90년대 중반에 이뤄지고 있는 독립영화의 의미 규정에서 비롯된다.

진행형인 90년대 독립영화는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상 문화산업의 틀이 지니는 상업적인 한계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영화정신에 개입하는 것들로부터 독립을 지향한다.'는 독립영화의 원론적 정의를 동일한 범주적 기초로 삼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개개의 영화적 지향은 너무나 큰 편차가 있고, 이를 구현하는 영화의 형식과 내용도 따라서 다양하다.

인류의 이상을 향한 실험인 '사회주의'의 깃발이 동유럽에서 내려진 후, 그리고 30년 넘어 지속된 국내 군부 통치가 종식된 후, 기존 독립영화진영은 쇠락해 갔다. 그 상징은 극영화제작의 메카였던 '장산곶매'의 해체였다.

'장산곶매'가 만든 영화는 우리 삶을 규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사회적 조건인 정치권력의 성격을 문제삼은 역작이었다. 민주주의를 향한, 그리고 착취로 인한 불평등을 넘어서려는 당대 사회운동의 지향을 집약한 거대하고 명쾌한 '그림'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해체는 '목표를 잃어버린, 혹은 대안을 상실한(?)' 민족민주운동의 퇴조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작자본의 확보, 작품을 만드는 인력들, 영화를 배급할 수 있는 경로 등 한편의 영화가 만들어지고 관객과 만나는데 필요한 독립영화진영의 제반역량들의 유실을 뜻한다.

그 이후 독립영화는 '개인'의 영화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다. 이들은 '정치적'인 경우에도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동시에 형성되는 작은 권력관계들을 중심에 놓는다. 우리 삶을 규정하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천착도 '승리한 자본주의'에서 필연적으로 태어나는 낙오자나 패배자의 얼굴을 따라간다. 개인이 구체적이고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진실을 증시하고, 그것을 기초로 '세계'와 '인간'을 해석한다. 그래서 그 표현양식 또한 다양하다. 그리고 제작과 유통방식도 달라졌다. 각종의 영화제와 케이블 TV 등 합법적인 경로, 즉 상업적인 유통망을 타기 시작했다.

이런 현실에서 '독립영화'라는 용어는 동일한 범주적 기초만을 지닌 채 서로 다른 층위와 영역을 두루 이르는 이름이 되고 있다.

제도권 상업영화 내에서의 독립프로덕션, 박제호 감독의 <내일로 흐르는 강>에 부여된 독립영화라는 칭호는 미국의 '인디영화' 개념과 비슷하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는 감독 중심의 영화이면서 저예산으로 제작되는 특징을 가진 미국의 '인디영화'는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메이저에서 만들지 않은 영화'이다. 이런 미국의 인디영화의 구분 기준은 제작자본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의 여부이다. 이와 달리 우리는 한국영화의 평균 제작비를 밑도는 '저예산' 영화가 저널에 의해 독립영화로 규정되기도 한다. 또한 몇 년 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개인들의 단편영화가 자칭타칭으로 독립영화이다. 순전히 자기 주머니를 털기 때문에 '자본의 개입' 없는 독립적인 제작이

가능하고, 배급은 상업적 유통망의 일부를 타거나, 비제도권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방식이 존재한다. 그리고 제작과 배급 모두에서 80년대의 독립영화와 같은 영화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구체정리는 영화를 만드는 제작자본과 배급방식의 차이로부터 비롯한 미국 인디영화의 개념을 원용한 구분일 뿐, 전혀 다른 배경과 형성과정을 지닌 한국의 독립영화를 관별하는 충분한 기준은 될 수 없다. 80년대의 한국 독립영화가 제작자본과 배급방식에서도 상업영화와 확연한 변별성이 있었음은 사실이나, 이는 정치권력에 의한 영화검열이 엄존한 상황을 돌파하려는 방법론적인 선택의 결과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독립영화는 작가의 (감독의) 영화적 지향이 무엇이든, 그것을 구현하는 영화의 내용과 형식이 어떠하든, 검열에 대한 현실적 대응과도 무관하게, 제작비 규모나 제작자본이 영화에 개입하는 종도에 따라 제도권의 상업영화부터 비제도권의 언더그라운드영화까지를 포괄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다시 뒤집으면 영화 자체만으로는 상업영화와의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상업자본의 논리 속에서는 다다를 수 없는, 제도권의 영화가 흥행에 대한 고려 때문에 시도하지 못하는 '기발하고 실험적인 시도'를 싣는 영화가 서구 독립영화의 태생과 전개과정을 관통하는 특징이라면, 우리 독립영화의 지배적 경향은 '정치 권력과 기존 사회체제의 부조리에 반기를 든 영화'였다. 그러므로 상업영화와의 경계가 불분명해졌다는 사실은 90년대 중반의 한국 독립영화가 자기 '전통'과 단절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다.

한국 독립영화의 무지를 연다.



MEMO

제 2 부

제 2 부

한국 독립영화의 무지를 깬다.

1 실제로 독립영화 작품인 다큐멘터리, 극 영화, 애니메이션을 보고 그 작품의 감독들과 대담을 갖는다.

1) 다큐멘터리

<상계동 올림픽> (27분/푸른영상, 김동원/1988년)

88년 올림픽 개최를 위해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명목으로 강제로 삶의 자리를 빼앗긴 상계동 철거민들의 험겨운 투쟁과정을 같이 생활하면서 만든 작품

<미디어 숲속의 오늘> (36분/푸른영상, 김동원/크리스찬 아카데미/1995년 5월)

한 인간의 삶과 생활 속에 대중매체가 얼마나 깊숙히 스며들고 있는지를 드라마다큐형식으로 구성한 작품
1부 드라마·TV의 포로가 된 한 인간의 일생 2부 다큐·TV와의 전쟁

2) 극 영화

<GRAND FATHER> (김용균)

현대 사회에서 노인의 소외 문제를 다룬 작품

<얼굴> (동국대 영화학부 영화모임 전진 새날)

5.18 광주 항쟁의 상흔을 영상적 표현으로 재조명한 작품

3) 애니메이션

퓨치아트 작품들 (퓨치 아트)

애니메이션이라는 특성으로 영상을 이루어낸 단편의 여러 작품들

2 비디오 다큐멘터리 영역

이 영역은 극 영화쪽과는 달리 8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별다른 제작역량의 손실 없이 꾸준히 80년대 독립영화의 맥을 잇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다. 노동운동과의 결합 속에서 시기별 노동운동의 상황과 정치적 쟁점을 다루는 정기적인 비디오매거진 <노동자뉴스>와 노동자교육용 영상물을 주로 제작하는 '노동자뉴스제작단', 도

시민민문제를 중심으로 인권, 여성, 통일 등 사회 각 부문의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있는 '푸른영상', 한국 독립영화의 출발을 알리는 이름이자, 그 역사와 함께한 '서울영상집단' -물론 구성원이 바뀌고, 그때마다 조금씩 성격이 달라져왔다- 등이 주축이다.

3 독립영화의 존재 이유

대기업의 영화산업 진출 이후 영화시장 전반이 빠른 속도로 재편되고 있다. 그 구조는 할리우드와 흡사하다. 영화제작에의 투자, 외화수입, 그리고 극장-비디오-케이블TV 배급 등으로 이어지는 영화시장의 메카니즘 전체가 대자본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품성'-그것이 무엇이건-을 갖지 못한 영화가 외면당하는 일은 지금보다도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영화현실과 전망 속에서 독립영화는 거대자본이 장악해가는 영화시장안에서 철저히 '상품'이 되어야 하는 상업영화의 '대안'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아직 이것은 이론일 뿐이다. 현실에서의 독립영화는 상업영화가 담보하지 못하는 '비판'과 '실험'이 풍부하게 이루어지는 영역이 아니다. 상업영화의 아류로 길이란 짧거나, 아니면 '실습'에 불과한 영화들이 많다. 그리고 이들이 이윤을 극대화할 재기발랄한 감독을 간택하려는 자본의 유혹을 뿌리치고서 고단한 작업을 계속하는 독립영화작가로 커가기도 독립영화의 제작현실은 너무 남루하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독립영화의 독자적인 제작과 유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지 못한다면, 상업영화의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화작업들의 대부분이 결국은 거대자본으로 흡수되어 갈 것이라는 점이다. 그 안에선 오직 하나, '상품'이 되는 저항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MEMO

1998년 12월 15일

제 3 부

번호 12조수정

당신이 바로 독립영화의 주인이다.

7

제 3 부

이문 | 조두환

[illegible]

당신이 바로 독립영화의 주인이다.

2번의 강의로 독립영화의 정확한 의미 규정을 공유한 것을 바탕으로 관객이라는 수동적 위치에서 벗어나, 직접 제작자가 되어서 독립영화를 만드는데 참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비디오 카메라로 현장에서 같이 작업하며 영상언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이를 통해서 대안적 미디어 운동이라는 우리의 과제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

아직 이론적인 정식화는 되어있지 않지만 - 독립영화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90년대 초반 민족영화연구소의 작업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진행된 것이 없다. - 문화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독립영화를 바라보는 논의들이 있다. 보다 많은 대중들이 문화생산의 주체가 되도록 교육하는 것이 90년대 영화운동의 실천형태일 수 있다고 보며, 교육을 통해 배출되는 일반인들에 의한 제작물을 독립영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1 제작구조의 문제

현재의 독립영화가 관객을 만날 수 있는 경로는 많지 않다. 그리고 이런 경로도 활용하려면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대학이나 사회단체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공연법 적용을 받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올해 3월 <한국독립영화제> 개폐막 초청작으로 예정되었던 <파업전야>와 <오! 꿈의 나라>가 검열불가 입장을 고수한 '장 꽃매' 회원들의 결정에 따라 상영이 무산된 사실에서 보듯, 일반 극장이 법을 무시하는 용단을 내리기란 어렵다. 그러나 사회단체 등의 상영은 공연장으로 등록된 극장 외에서의 상영을 제한하는 법 규정에 따라 또 불법이라서 법적 제재를 의식해야 한다. 대부분 묵인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당국과 마찰을 빚을만한 영화라면 억압은 언젠가 재개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독립영화의 독자적인 제작과 유통구조의 형성을 위한 첫번째 조건은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문제로 다시 돌아온다.

그러나 설사 법적 억압장치를 넘어선다 해도 '벽'은 남는다. 상업성을 고려하는 자본의 논리는 극장부터 비디오 대여점까지 규모와 상관없이 관찰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업자본의 개입과 투자 없이 독자적인 기획과 자본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영화는 제작비 규모가 크지 않은 것들 뿐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독립영화는 단편이 주종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상업성에 물들지 않은 대안적인 상영공간의 창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이 소규모 극장이든, 대학이든, 사회단체든, 자기 '공간'을 가지고 있는 곳과의 연계는 현재 미비하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독립영화권이 무엇보다도 주력해야 할 것은 질 좋은 영화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경제법칙은 최소한 독립영화 영역에서는 타당한 구석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업자본에 기대지 않고도 제작이 가능한 자본을 축적해야 한다. 방법은 '기금'이다. 언제라도 독립영화인들이 활용

가능한 공동기금의 조성이 독립적이지 제작을 온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은 무엇보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출자'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폰돈'일지언정 배급을 통해 받아들이는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환원하는 방식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90년대 독립영화는 세간의 진단이 어떠하든 여전히 '검열과 자본'의 싸움이 전제가 된다. 그러나 영혼을 녹인 일임을 모르고 자본의 간택을 기다리는 '철부지들'과, 점점 거대해져가는 그래서 더욱 위력적인 자본의 힘이, 그로부터 나오는 권력이 우리의 제권리와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은 변함이 없는데도 '세련된 방식'의 저항임을 내세워 본질을 비껴가는 문화주의자들과, 독립영화는 여전히 영화운동의 다른 이름이어야 한다고 믿으나, 영화적으로는 무능한 '투사'들로 대부분 이루어진 현재 독립영화의 대오는 이 싸움을 감당하기에 너무 보잘 것 없다. 그러나 여기가 바로 우리의 출발지인 것이다.

독립영화는 지금 영화의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해 검열의 벽을 뚫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 시도는 제도권의 통제로부터, 주류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 활동기반이 되는 독립영화인들의 몫이 되어 연대하여 투쟁을 시작하였다. 그들의 문제의식과 치열한 투쟁은 돌파구를 찾았고, 단편, 소형, 비영리 영화는 심의(검열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의 잣대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작은 성과였다. 아직 검열은 철폐되지 않았고, 비디오법은 악폐를 가진 그대로 해결되고 있지 못하다. 그렇지만 이 모순 가득한 현실 속에서 독립영화는 계속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며, 서로 다른 목소리,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다다갈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날 독립영화를 위해 우린 진심어린 성원을 보낼 것이다.

2 공동체주의 자치대학 건설을 위한 제2대학 문화분과

우리가 만들어 간다, 우리의 문화를!!

문화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것이 비록 힘의 논리에 의해서 왜곡되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익숙화되어 문제 의식이 무디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능동적으로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여기에서는 나는 얼마만큼 문화의 주역이었는지를 반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작된 문제의식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제시할 수 있다. 문화 이론, 영화, 음악,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을 공부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강연회를 개최한다.

무엇이든 시작은 어렵다. 그렇지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받은 일일 것이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기를 계속하며 그런 고민들 속에서 누군가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고 싶다. 그런 계기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 2대학이 그리고 문화분과가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도와주신 분들

최진아 강사님

정선호 선생님

김용균 감독님

독립영화 협의회

푸른 영상

영화제작소 청년

퓨처아트